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출범포럼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비전과 역할

2020. 1. 30. THU, 15:00 ~ 20:00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수원

| 주최 · 주관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목 차

▣ 세부일정 및 내용

▣ 제1섹션 Ⅱ

발표 Ⅰ 임학순(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가톨릭대 교수) 5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비전과 계획」

- 토론1. 고윤정(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팀원) 21
- 토론2. 정종은(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4
- 토론3. 심재연(부천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27

▣ 제2섹션 Ⅱ

발표 Ⅱ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31

「2020 지역문화 이슈와 정책방향」

- 토론1. 김성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47
- 토론2. 문윤걸(완주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장, 예원예술대 교수) 50
- 토론3. 최혜자(문화디자인자리 대표) 52

▣ 제3섹션 Ⅱ

발표 Ⅲ 백선혜(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57

「문화통계, 빅데이터와 지역문화재단」

- 토론1.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73
- 토론2. 임영숙(데이터마케팅코리아 수석컨설턴트) 80
- 토론3. 이수철(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과장) 86

▣ 종합토론

포럼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등 록	14:30~15:00	- **등록 및 행사안내**
인사말	15:00~15:10 (10′)	**사 회 / 조선희(지역문화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 - 김윤기(한광연 회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전지연 회장,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축 사	15:10~15:20 (10′)	-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김시범(한국지역문화학회장, 안동대 교수)
1섹션	15:20~16:10 (50′)	**사 회 / 양지연(한국예술경영학회장, 동덕여대 교수)** ○ **발 표 Ⅰ / 임학순(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가톨릭대 교수)**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비전과 계획」 토 론 1 / 고윤정(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팀원 토 론 2 / 정종은(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 론 3 / 심재연(부천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2섹션	16:10~17:00 (50′)	**사회 / 김인설(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발 표 Ⅱ /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2020 지역문화 이슈와 정책방향」 토 론 1 / 김성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2 / 문윤걸(완주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장, 예원예술대 교수) 토 론 3 / 최혜자(문화디자인자리 대표)
3섹션	17:00~17:50 (50′)	**사회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 **발 표 Ⅲ / 백선혜(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문화통계, 빅데이터와 지역문화재단」 토 론 1 /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토 론 2 / 임영숙(데이터마케팅코리아 수석컨설턴트) 토 론 3 / 이수철(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과장)
종합토론	18:00~18:30 (30′)	**사 회 / 조선희(지역문화정책연구소 사무국장)** ○ **발표에 대한 질의 응답 및 토론**
만찬	18:40~20:00 (80′)	○ 만찬

주요 행사장 정보

장소명		진행사항	주소	연락처
행사장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3층 몽마르뜨홀	포럼, 정기총회(1.31.)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	031)230-5000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3층 몽마르뜨홀 VIP실	내빈 대기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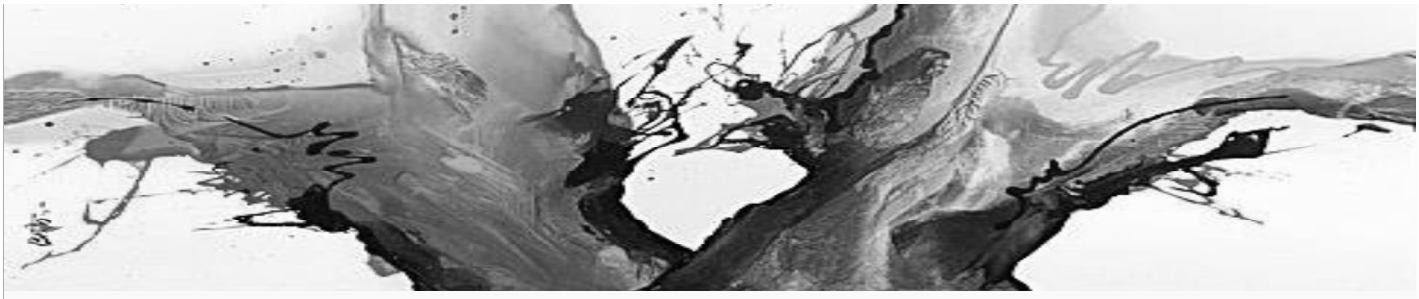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 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 도보 2분, 수원역에서 오실 경우 차량 약 10분 소요입니다.(B2-B6 주차가능)

제1섹션

발표 Ⅰ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비전과 계획

임학순 | 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가톨릭대 교수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비전과 계획

임 학 순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E-mail: hsyim@catholic.ac.kr

Contents

Ⅰ. 설립 배경과 의의

Ⅱ. 지역문화재단 연구 실태

Ⅲ.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비전과 미션

Ⅳ.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주요 사업

Ⅴ.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운영체계

Ⅵ. 단계별 추진 전략

Ⅰ. 설립 배경과 의의

Ⅰ 설립배경과 의의

자치분권 흐름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정책 역량 강화

- 지역 문화 현장과 수요 기반의 적실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1. 중앙집권 – 지역확산: 1980년대

– 지역문화중흥 5개년 계획(1984)

2. 지방자치 – 지역문화진흥

– 지방자치제도(1995)
– 경기문화재단설립(1997)
– 창의한국(2004)의 “분권 "
- 지역문화진흥법(2014)
-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3. 자치분권 – 문화분권

– 자치분권 로드맵(2017)
– 문화비전2030(2018)의 “지역문화 분권 실현“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예정
- 문화도시 조성
- 제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Ⅰ 설립배경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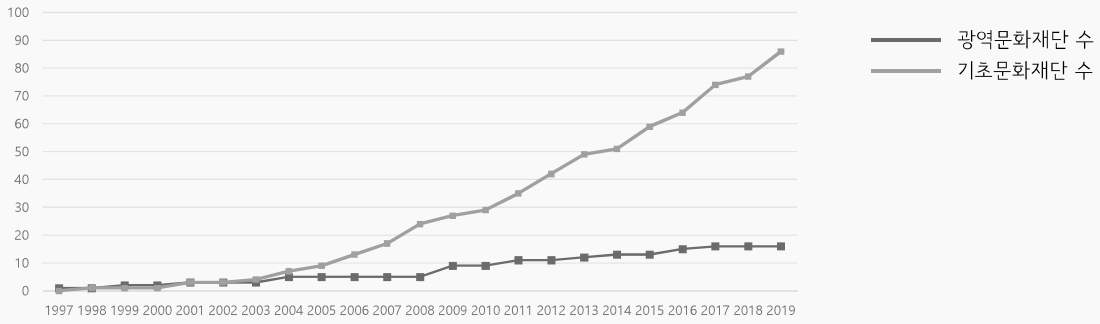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증가 및 정책 역량 수요 확대

- 지역문화재단의 공공책임성 확보 및 효과성 증진 필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지속 확대 추세(2019년 12월 기준 광역 16개, 기초 87개)

- 광역문화재단(1997~): 16개 (2020년 17개 전망)
- 기초문화재단(1998~): 87개 (2020년 90개 이상 전망)

지역문화재단 설립 추이



Ⅰ 설립배경과 의의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인력, 사업

1. 광역문화재단

- 예산 : 평균 321억원 (약 총 5,136억원)
- 인력 : 평균 98명 (약 총 1,568명)
- 사업 개수 : 1개의 광역문화재단 당 평균 50개

2. 기초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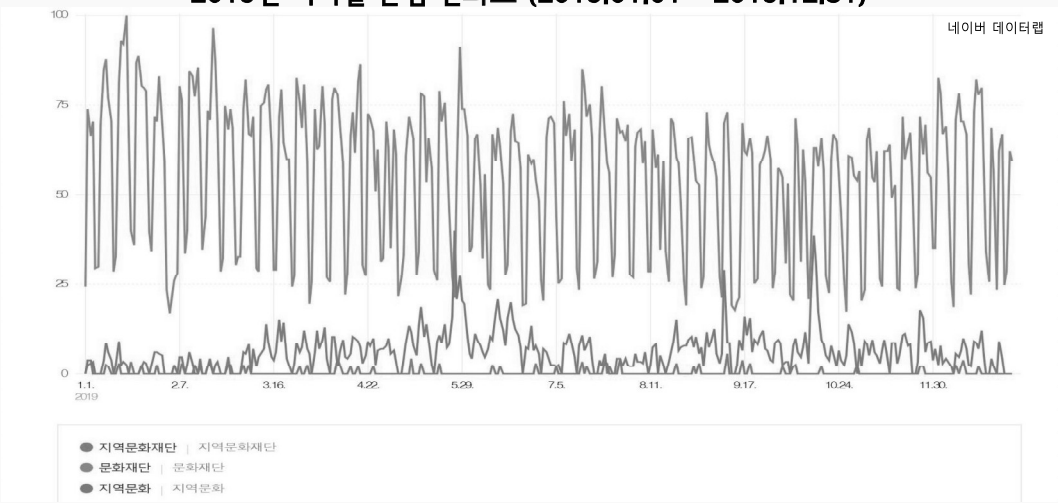
- 예산 : 평균 105억원 (약 총 9,165억원)
- 인력 : 평균 57명 (약 총 4,959명)
- 사업 개수 : 1개의 기초문화재단 당 평균 33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Ⅰ 설립배경과 의의

✓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9년 시기별 관심 변화도 (2019.01.01 - 2019.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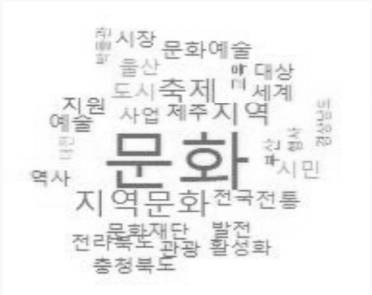
- 네이버에서도 관심도는 '문화재단'>'지역문화'>'지역문화재단' 순으로 나타남

자료 제공: 황서이(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교수)

Ⅰ 설립배경과 의의

✓ 언론에 나타난 '지역문화' 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

1995-2019



■ 데이터 수집

- 검색어 : 지역문화
- 데이터 수집 기관 : BigKinds(한국언론진흥재단)
- 연구 범위 : 47개 중앙지, 경제지 및 지역종합지
- 시기적 범위 :1995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 분석대상 : 29,053건 언론 기사

1995-1999 | 2000-2004 | 2005-2009 | 2010-2014 | 2015-2019

자료 제공: 황서이(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교수)

Ⅰ 설립배경과 의의

✓ 지역문화정책연구소 계획 수립과정 (2019.08 - 2020.01)

- 지역문화정책연구 라운드테이블(서울, 경남)
- 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 지역문화재단 현장 간담회
- 지역문화재단 연구체계 및 연구자료 분석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연구 협력 협약 (2020.01.17)

Ⅱ. 지역문화재단 연구 실태

II 지역문화재단 연구 실태

지역문화재단

- 경영기획 + 정책연구 혼재(자체 연구체계 미흡)
- 인력 규모: 0명 - 5명 격차 심함

지역연구원(13개)

- 문화정책 연구 인력: 1-2명
- 연구원별 문화정책 연구과제 건수 차이(연간0-6개)
- 2019년 총 26편정도 (홈페이지 공개자료 기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역문화 관련 법제도, 기본계획, 정책기반 등 지역문화정책 연구 프로젝트 수행
-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문화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25개(홈페이지 공개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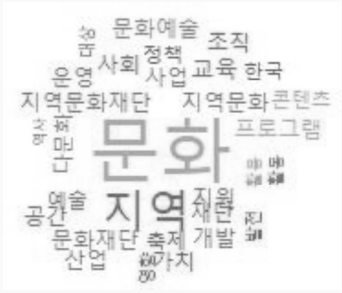
학계

- 한국지역문화학회, 지역학회, 대학연구소
- 2002년 이래 100여 편의 지역문화재단 관련 학술논문 발표

II 지역문화재단 연구 실태

학계에 나타난 '지역문화' 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

199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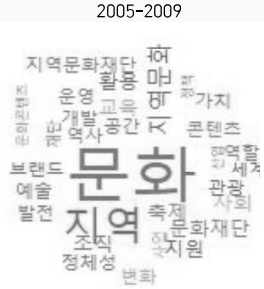
■ 데이터 수집

- 검색어 : 지역문화
- 데이터 수집 기관 :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연구 범위 : KCI 우수등재 및 등재지
- 시기적 범위 :1995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 분석대상 : 14,150편 논문의 서명, 초록, 주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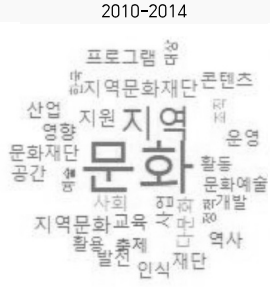
1995-1999

2000-2004

2005-2009



201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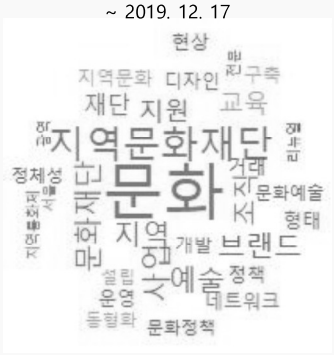
2015-

자료 제공: 황서이(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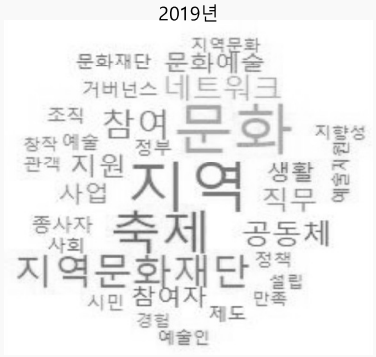
II 지역문화재단 연구 실태

✓ 학계에 나타난 '지역문화재단' 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

~ 2019. 12. 17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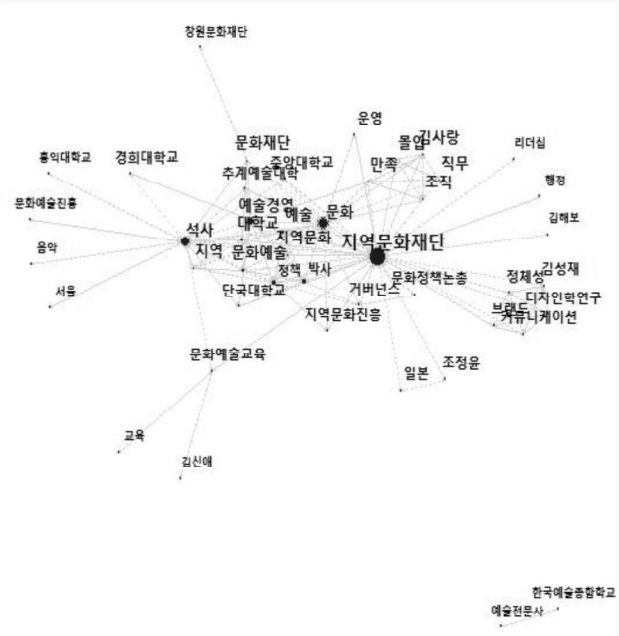
■ 데이터 수집

- 검색어 : 지역문화재단
- 데이터 수집 기관 :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연구 범위 : KCI등재 학술논문
- 시기적 범위 : ~ 2019년 12월 17일
- 분석대상 : 77편 논문의 서명, 초록, 주제어

자료 제공: 황서이(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교수)

II 지역문화재단 연구 실태

✓ 지역문화재단 학술논문 연구자 분석



1. 1995- 2019년까지 지역문화재단 학술논문 연구자 분석.
2.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 매우 미비**
3. 공동연구 미비, 단독 연구가 비중이 큼
4. 중앙대, 추계예술대, 단국대, 경희대, 홍익대 연구자들이 주로 연구
5.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 행정, 정책 학과 연구자들이 대부분**
6. 문화정책논총, 디자인학연구 등의 학술지에서 게재됨
7. 석사 박사 학위 논문과 이에 기반한 연구가 많음.
8. 연구주제는 **거버넌스, 조직과 운영, 리더십, 사업 사례** 연구 등

자료 제공: 황서이(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교수)

Ⅱ 지역문화재단 연구 실태

지역문화재단의 현실과 연구 수요 FGI 결과

- “문화분권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 새로 찾아야”
- “문화분권 시대, 지역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광역과 기초의 거버넌스**, 공공과 민간의 협력망 새로 찾아야”
- **“2020년 지역문화재단 100개 시대**, 공공책임성과 사회적 신뢰 얻어야”
- “이제 지역 기반의 적실성 있는 계획과 정책과정 디자인해야”
- “지역을 다각도로 이해해야. 지역특성, 지역자원, 지역주민, 지역사회 문제, 환경변화와 지역사회 문제 등“
- “지역문화재단 **통계가 취약**하다”
- “지역문화재단의 **자료 아카이빙 및 활용 체계가 미흡**하다”
-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의 **공유, 연결 체계가 미흡**하다”
- “지역문화재단 **신세대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무대 마련**해야”
- “앞으로 전달체계를 넘어 문화실천가, 문화주창자, 문화연결자 역할 수행해야 ”

Ⅲ.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비전과 미션

Ⅲ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비전과 미션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Koreas Research Institue for Local Cultural Policies)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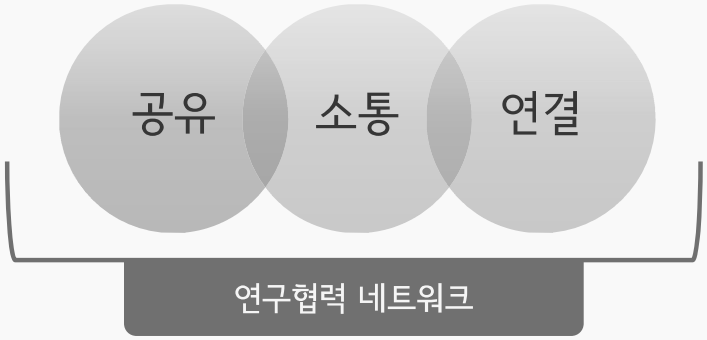
지역 중심의 문화 자치와 문화권 실현

MISSION

-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역량 강화
- 지역문화정책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연구체계 구축
-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Ⅲ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



주요사업

- 이슈 발굴-공론-해결 네트워크 구축
-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 지역문화재단 지표체계 및 통계조사
- 경험과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Ⅳ.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주요 사업

Ⅳ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주요 사업

1. 이슈 발굴 - 공론 - 해결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정책포럼』 운영 및 브랜딩

-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
- 현안 정책 이슈 논단 및 해결책 공론의 장

☑ 『지역문화현장 라운드테이블』

- 지역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 연 4개 지역 현장 순회 라운드테이블 운영

☑ 지역문화정책 연구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재단(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재단연합회)
- 지역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역문화정책 관련 학회, 지역학 연구회, 대학연구소, 민간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 『지역문화정책 전문가 Pool』 구성

Ⅳ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주요 사업

2. 지역문화재단 지표체계 및 통계조사

지역문화재단 지표체계 개발

- 지역문화재단 지표체계 및 통계조사 방법 연구(2020)
- 지역문화지표조사, 지역문화통계 체계와 연계
- 『지역문화재단 통계』 발간(2021)

지역문화재단 백서 발간

- 『2020 지역문화재단 백서』 발간 (2020)

※주요 목차

- 지역문화재단의 이슈와 동향
- 통계 및 빅데이터로 본 지역문화재단 현황
-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전략, 조직, 인력 체계 현황
-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현황
- 지역문화재단의 시설 운영 현황
-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현황
- 미래 환경변화와 과제

Ⅳ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주요 사업

3.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지역문화정책 연구 프로젝트 개발

- 미래 환경 및 문화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정책 과제 연구
- 자치분권, 문화자치시대의 지역문화정책 과제 연구
-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역량 강화 및 지속 발전 방안 연구
- 현행 지역문화정책 평가 연구

연구네트워크 기반의 공동 연구체계 구축

- 연구 프로젝트별 전문 연구팀 구성 운영

자체 연구진 확보

- 2023년부터 자체 연구진 기반의 연구체계 구축

Ⅳ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주요 사업

4. 경험과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문화자치』 웹진 운영

- 현장에서 발굴한 지역문화 이슈 탐방
- 전문가 문화자치 이야기
- 지역문화재단 사례 공유 웹진 간담회
- 2021년부터 연 4회 발간

☑ 지역문화정책 연구자료 아카이빙 및 공유

- 조사, 연구 자료 아카이빙
- 포럼,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자료 아카이빙
- 지역문화재단, 연구원, 학계 등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자료 아카이빙

☑ 『지역문화재단 축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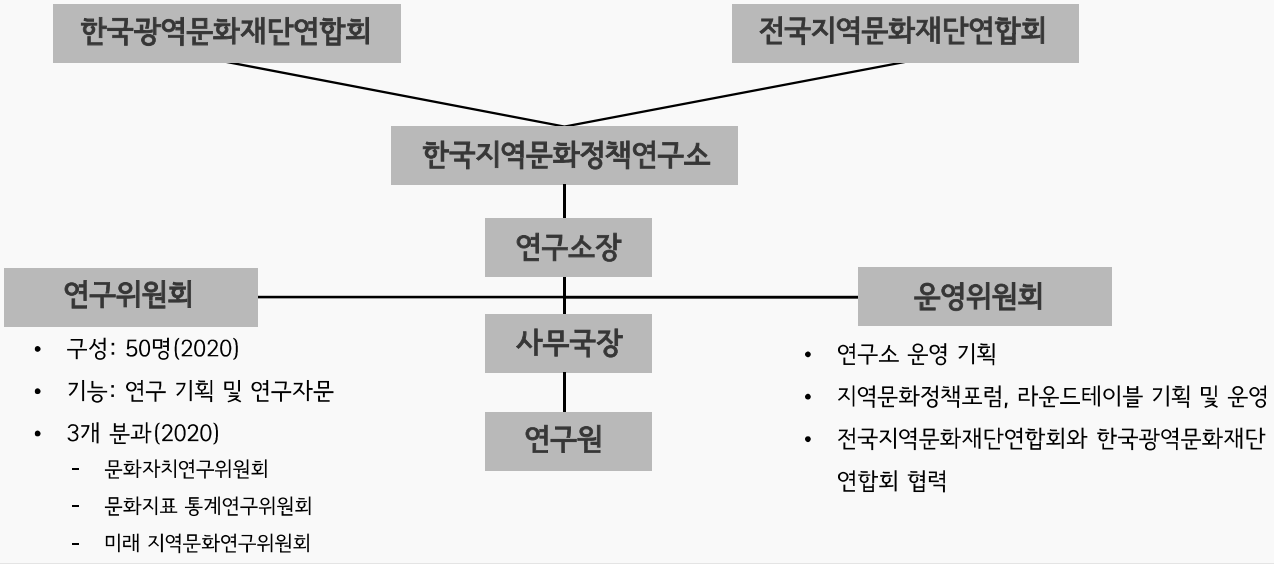
- 지역문화재단의 연결, 공유, 창조 네트워크 축제
- 지역문화재단의 가치 확산 및 브랜딩
- 지역문화재단의 경험, 지식 공유 플랫폼
- 2021년부터 연 1회 정기 개최

Ⅴ.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운영체계

Ⅴ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운영체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협력체계

- 협약 체결, 공동 계획 및 운영



Ⅵ. 단계별 추진전략

Ⅵ 단계별 추진전략

구분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2020)	연구체계 구축 (2021-2022)	자체 연구 역량 강화 (2023-2024)
연구 사업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연구 협력체계 구축 •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정책 " 포럼 및 순회 라운드테이블 활성화 • 지역문화재단 지표체계 개발 및『지역문화재단백서』발간	• 지역문화재단 통계체계 구축 및 “지역문화재단 통계 " 발간 • “문화자치 " 웹진 발간 • “지역문화재단축제 " 개최	• 자체 연구원 기반의 연구체계 구축 • 해외 지역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
운영체계	연구지원 인력 1명	연구원 1-2명 사무국 공간 확보	연구원 3-5명

제1섹션 토론

발표 Ⅰ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비전과 계획

토론 1

고윤정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팀원

토론 2

정종은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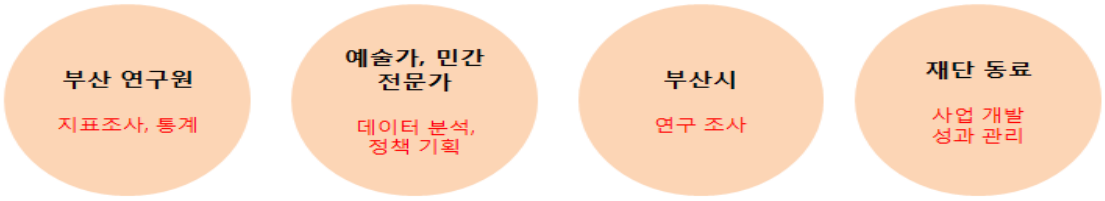
토론 3

심재연 | 부천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지역문화재단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중간지원조직의 관성화를 탈피하고 문화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로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직제를 개편해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되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단 비전 2030 선포, 문화정책위원회 구성, 박사급 연구직 채용, 포럼 개최, 연구과제 수요조사, 정책 DB 구축 등 여러 일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충을 토로하건데, 아직도 정책연구센터의 중점 방향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막막하다.

비전 2030 집필을 담당하면서 만났던 관계자들의 제안을 인용해보겠다. 광역문화재단으로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측면은 일치했지만 구체적인 역할에 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연구자들은 지표 조사와 통계를, 예술가 및 민간 전문가는 데이터 분석과 정책 기획을, 부산시 관계자는 연구 조사를, 재단 동료들은 사업 개발과 성과 관리 역할을 요청했다.



[재단 비전 2030 수립 참여 관계자들이 요청한 정책 기능]

2019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최한 포럼 자료들을 분석해봤다. 한광연 정책 워크숍(1월), 한광연 정책 포럼(2월), 지역문화 정책 포럼(6월) 자료집에 정책 단어가 총 763회나 등장한다. 재단의 정책 역량 강화는 모두 동의하지만 세부기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본부장은 조사통계의 정기적 생산과 문화통계 공유 시스템 강화를 언급했고,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팀장은 현장성 있는 정책기획과 사업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과 사업 이전에 지역 문화예술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와 이 자리에 계신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에게 묻고 싶다. 각자가 생각하는 문화재단의 정책 기능, 정책 역량 강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정책)분석? (정책)개발? (정책)연구? (정책)제언? (정책)평가?

토론자에게 너무 정책기능을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다. 물론 상기 기능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순차성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텍스트에 있는 단어를 근무 현장으로 가져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첫째, 정책 기능을 연구 기능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연구원이 정책 생산 주체이며, 연구 보고서를 핵심 성과물로 여긴다. 연구원 증원 혹은 연구 네트워크 구축도 힘든 재단은 전문화된 정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조급해진다.[1] 연구 만능주의에 빠져 사업 담당자와 연구자의 격을 나누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2] 둘째, 정책 기능 핵심을 조사·분석인지 사업 개발인지 따라 전담 직제의 조정을 반복할 수 있다. 정책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 소지도 크다. 일부 광역문화재단에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전담 부서들이 학술/경영기획/사업개발/사업평가와 혼재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부서와 갈등을 빚거나 직제 상 조정을 반복하지 않았나.[3] 셋째, 정책 기획을 주된 역할이라고 볼 때 성과분석과 경영평가 등을 담당해 온 부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경영기획 파트에서 예산·인사·평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추상적인 '정책 기능'이 붙여지니 역량 고도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u>발제자에게 그래서 또 묻는다. 문화재단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협력 주체를 누구로 기대하는가? 연구자? 임원? 성과관리 담당? 경영기획? 그냥 한광연 담당자?</u>

2020년 지금! 지역문화재단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부터 시작할까. 누구와 우선적으로 함께 고민을 공유해야 하나. 먼저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적 사업주체(Institute)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4] 재단의 핵심 고객은 예술가와 시민이며 우리는 정책 수립과 동시에 사업을 실행하는 '정책 실행 집단'이다. 그래서 '현장성'과 '정책의 사업화'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연구는 현장성 있는 연구, 정책 개발은 사업화 하를 염두 한 정책 개발 말이다.

더불어 실현 가능성을 염두 해야 한다. 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 크게는 한정된 자원(예산, 인력), 시(市)의 의지, 조직의 관성화이다. 아무리 좋은 제안도 여건에 맞지 않으면 공염불이지 않나. 그 점에서 추가 예산과 인력이 아니라도 공통의 학습과 경영의지만 있으면 개선 가능한 요소가 성과 관리를 통한 정책 개발이다. 목표는 구체적인가, 비전과 연계성은,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 네트워크 확장계획은, 정성 정량 성과 계획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문화예술 중간지원 조직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해야지만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적극 옹호할 수 있다. 필자 입장에서는 한광연 정책연구소에서 재단의 성과 관리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고 사례를 공유는 활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경영기획과 정책기능 연동이 부정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성과 관리가 정책 제언과 옹호의 필수 요건이 아닌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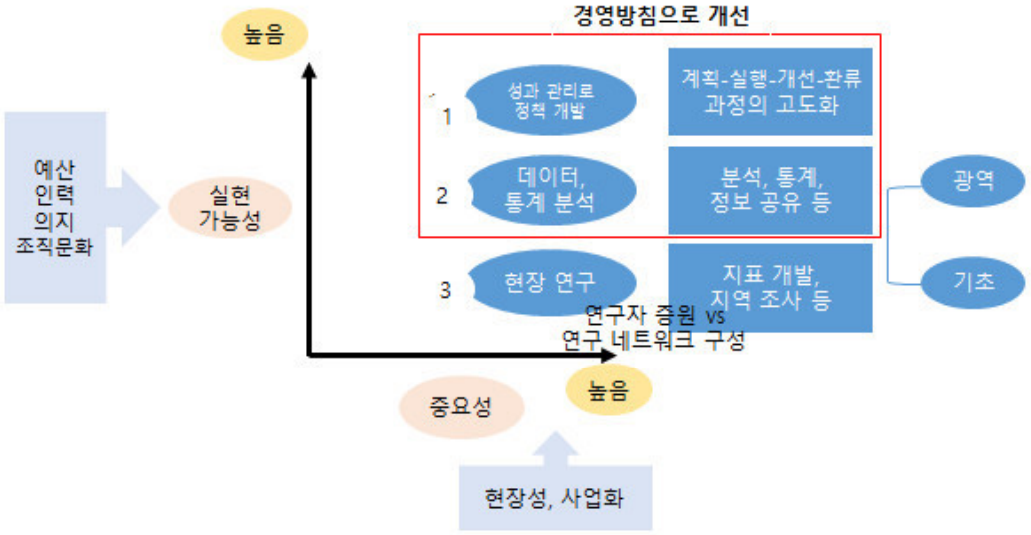
1) 부산문화재단의 반성이기도 하다. 그동안 기획홍보팀 내 정책연구센터가 운영되었지만 실적이 미비했고, 그럴 때 마다 연구원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2) 실제 부산경제산업진흥원 내 경제동향센터는 이문제로 올해부터 부산연구원에 재편입 되었다.

3) 서울문화재단은 11년 정책연구실 TF 가동 후 정책연구팀으로 편성. 이후 미래전략팀으로 개편되었다가 현재 전담부서가 해체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 지역정책팀 발족 후 문화정책팀을 폐지 해 문예지원팀과 교육·사업팀에 기능 분산했다가 현재 정책실 형태로 운영 중이며, 인천문화재단은 연구출판팀에서 홍보출판팀과 정책기획팀으로 기획팀과 분리 통합을 반복하다가 현재 정책연구팀으로 운영 중이다.

4) 조정윤(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대 방안, 2015)

다음으로 문화 통계를 정기적으로 모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적극적인 통계 축적과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수많은 예술가·민간 전문가, 민간 연구자들이 여기에 살을 붙이고 생명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자료는 차고 넘친다. 분석과 공유의 경험이 부족할 뿐이다. 핵심 주체는 자기 사업을 속속히 알고 있는 사업부서 리더·담당자이다. 자료 분석 목록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분석 회의를 주재할 협력자가 있으면 된다.
세 번째로 현장 연구는 예산과 인력 수반이라는 자원 투입이 불가피 하지만 재원과 함께 현장성이 담보된 연구자 증원이 가능하다면 성과관리, 데이터 분석 활동과 함께 정책 담론 형성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증원이 아니면 다양한 영역의 연구 네트워크로 보완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과 중요성에 따른 문화재단 정책 세부 기능 우선 순위]

지표를 구성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 트랜드 변화가 확인된다. 핵심 주체는 지역별 연구자이다.
대략적으로 문화재단의 세부 정책 기능과 우선순위를 제안해보았다. 우리는 각자 어디 위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한광연 정책연구소에서 면밀히 살펴 비전에 보완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소든 정책연구센터든 전담이 생기면 섬이 되기 쉽다. 누군가는 정책집단은 머리이고 사업은 손발이냐 말하기도 한다. 개인의 정책 역량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 나가가 지역 내 문화적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문화정책 역량 강화의 목표이다. 누군가를 대신해 정책을 기획·개발·연구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 모두가 정책 역량이 높아지도록 끊임없이 동기 부여를 하는 변화 지원자가 바로 각 재단의 정책담당부서, 그리고 한광연 정책연구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비전과 계획>에 대한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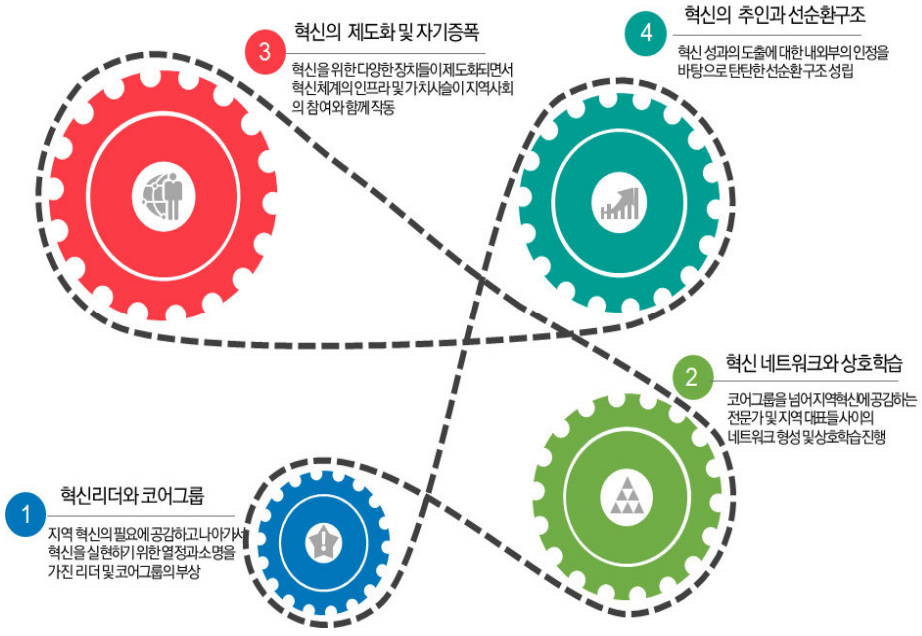
-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소간 늦은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야심찬 비전과 미션, 그리고 알찬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그려질 그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기도 했구요, 지역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문화재단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위상과 방향 속에서 더 큰 일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 평소에 생각해오던 내용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설립 배경과 의의' 부분에서 중앙집권 -> 지방자치 -> 자치분권의 시대로 진행해온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계가 해당 지역과 전국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흥미로웠지만, 더 주목할 지점은 지역 문화계의 컨센서스를 스스로 발굴하고, 키우고, 확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비장미가 느껴졌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그 숱한 회의와 포럼, 라운드테이블에서 언급되었던 '택배회사'라는 자조적인 탄식을 극복해야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 문화정책 연구자로서 '연구실태'에 관한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바, 재단의 연구실태 지표(p.11)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연구자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지역문화에 천착해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새길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연구수요 FGI에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통계나 아카이빙, 공유와 연결의 장, 젊은 인력들의 적극적 활동 무대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숙원사업들입니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이제 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출범과 함께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여타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 기관들의 정체성 역시 함께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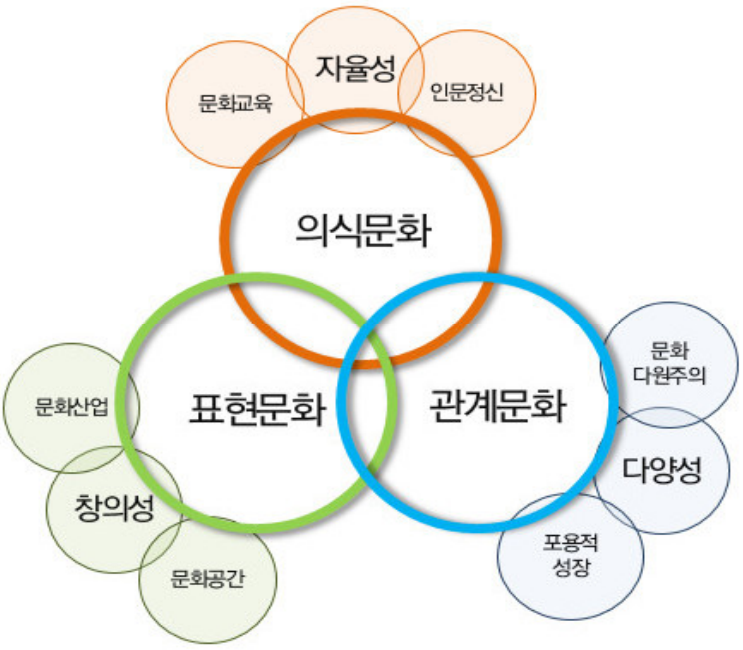
- 비전, 미션, 사업 역시 현재의 정책 트랜드와 주요 사업 성과들을 잘 관찰하고 고민하여 정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슈 지향 네트워킹, 정보 인프라의 구축(정기적 실태조사 필요), 적극적인 연구 사업 전개(추상도가 더 낮은 실질적 연구), 온-오프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집약되는 사업들은 세부 사업들 하나 하나가 많은 에너지가 드는 내용들이지만,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서 '대규모 원샷' 구축이 아니라 '소규모 점진' 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감이 갑니다. 물론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 두 가지만 첨언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계가 '지역문화'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 전체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문화계 역시 지역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도시재생에서 문화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된 것처럼, 지역경제 발전, 지역 브랜딩, 지역사회 복지 등도 지역문화계의 연구나 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계가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연구 사업 역시 이부분이 좀 더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진행한 한 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에서 지역혁신체계의 단계적 구성 과정에 대해 그려본 내용입니다. 지역문화계가 지역혁신을 위한 리더와 코어그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좀더 공세적이고 연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림] 지역 혁신 체계의 단계적 발전 과정

- 문화(as sector) 내에서 이와 같은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지역의 보다 넓은 의미의 혁신체계에 문화(as style)가 깊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친화형 지역혁신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 개념, 기존의 문화정책 개념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문화 개념과 정책 범위를 좀 더 확장하고, 새로운 범주 내에서 기존 정책과 사업들을 재구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5]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문화기본법의 기본 정신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각각 의식문화, 관계문화, 표현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부의 많은 사업들이 이미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기획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문화를 일종의 표현문화로 이해하는 관습에 젖어있기 때문에 보다 확장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사업을 기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들이, 그리고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연구들이 이와 같은 재구조화된 문화 개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그림] 문화(정책)의 세 층위

5) * 표현 문화: 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등 시각-청각-시청각 문화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간과 산업의 질을 혁신하고, 지역 혁신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의 전 세계적 유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현 문화'는 지역공간의 문화화와 지역산업의 문화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 관계 문화: 이러한 창조성은 언제나 다양성을 토양으로 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음. 지역의 보수성, 지역 토호세력의 폐쇄성 등의 표현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화적 퇴행성은 바로 이러한 관계 문화의 층위를 일컫는 것임. 지역혁신 생태계의 공진화를 위해서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문화를 넘어서,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한 차이에 대한 존중, 양적 성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인식 공감이 필수적임 / * 의식문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개방적인 태도는 '자율성'을 토대로 삼는 의식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훈련되고 익혀지는 것. 문화예술교육 정책이나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이와 같은 반성적 관점에서 전인적인 성찰과 참여를 자극하고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짐. 표현문화와 관계문화보다 그 성과가 덜 가시적일 수 있지만, 의식문화가 지역혁신 생태계에서 갖는 의의는 절대 덜하지 않음

필요에 의한 필요, 정책연구의 필요성

우리 모두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수행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재단은 이번에 출범하는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와 함께 문화자치와 문화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천문화재단과 문화정책연구

부천문화재단은 2001년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문화재단입니다. 초창기 문화정책실에서 현재 정책홍보부에 이르기까지 문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정책조사 및 문화정책연구개발사업 수행, 문화정책포럼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지역문화정책상의 문제제기와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재단 초기에 밝힌 "부천문화재단의 문화정책연구의 목적은 부천의 지속발전가능한 문화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문화기반조사 등 기본테이터를 축적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부천시 문화를 진단하고 검증하여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 이슈에 대한 시민과 관계자들간의 논의를 공유하여 정책대상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6)

20년 동안 한결같지는 않았으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과 끈을 놓치 않고 유지한 것이 현재의 '문화도시 부천'의 모습입니다.

늘 항상'지역문화정책'에 대해 말한다. 알지만 못하는 불편함

기초 간, 광역 간, 기초-광역 간 토론의 자리이거나 네트워크의 자리이거나 포럼이든 자리에 구분없이 항상 '지역 문화 정책'을 말합니다.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조는 변함이 없으며,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 실행과 전문성 강화가 재단 고유의 기능이라는 의견은 재단 내부에서도, 재단이 속한 지역에서도 항상 이야기되는 주제입니다.

굴벤키안재단의 정책연구 목적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 유발, 지원이 필요한 분야 파악, 예술의 경향과 변화의 예견, 예술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의 논의 촉발, 공공문화정책에 영향미치기7)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비전과 계획'발표문 중 지역문화재단 연구실태에서 보여주

6) 2001~2004 부천문화재단 백서, 21쪽
7) 부천문화재단10주년 토론회 자료집, 김경욱,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재단의 미래,72쪽 재인용.

고 있듯이, 정책업무와 인력은 필수이지만 여건상 불충분합니다.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 트랜드에 맞는 주제 발굴, 시정부에 정책 및 사업을제안하는 정책기능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것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문화재단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책기능의 수행력은 역시 조직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기능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있다하더라도 정책담당자는 1~2명 정도로 기획분야에 비해 소수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과 병행하면서 정책연구업무를 하기 때문에, 순수한 자체 연구가 쉽지 않고, 이것이 바로 지역문화재단의 한계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시정부도 다양한 사업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네트워크, 열정에 따라 높낮이 있는 편입니다. 한 도시의 다양한 영역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정책 간의 일관성, 연계성, 전문성 등이 잘 직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개발,지역의 문화정책을 담아내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일하는 연구소, 살아 있는 연구소

연구소의 주요사업으로 이슈발굴-공론-해결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재단 지표체계와 통계조사, 연구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지식정보 공유플랫폼 구축으로 연구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몇가지 제안해봅니다. (1)연구소에서 매년 연구주제를 제시하고, 각 재단에서 주제나 분야를 선택해서 공동연구를 해본다. (2)정책연구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재연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집행과 정책실패의 원인 분석으로 다음의 실패가 없고,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한다. 깊이있는 연구, 내실있는 연구, 절실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 연구주제도 지역문화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폭넓고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3)재단 정책담당자가 직접 연구에 참여한다. 공동연구작업을 통해 역량과 경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연구소의 자발적인 학습모임을 운영한다.

제2섹션

발표 Ⅱ 2020 지역문화 이슈와 방향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노영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2020 지역문화 이슈와 방향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2020.01.30.

노 영 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INDEX

Ⅰ. 들어가며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Ⅲ. 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안)의 방향
Ⅳ. 2020년 지역문화 이슈와 과제

본 발표문에서 제시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공식 계획과 다를 수 있음.

Ⅰ. 들어가며

지역사회가 직면한 도전

-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 및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도시환경의 노후화와 경제·산업 기능 유출,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은 사회공간적 위기 직면
- 도시쇠퇴 (urban decline), 도시축소 (urban shrinkage), 나아가 지방소멸의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음.

거역할 수 없는 흐름 : 포용과 혁신, 지역 자치와 분권

- 포용적 혁신국가와 더불어 지역의 자치와 분권은 핵심적 국정철학
- 균등한 기회와 자치권의 보장, 다양성 존중, 기술과 사회 혁신 추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색 요구
- 다만 지역간 경쟁 유발,자치권의 행사와 혁신 추구에 있어 힘의 불균형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Ⅰ. 들어가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문화'의 의미와 가치 재조명

- (문화의 소실) 쇠퇴, 축소 혹은 소멸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과 자산이 동시에 소실될 위기에 처함. 문화정체성과 문화경관이 훼손된 지역의 회복과 재생은 어렵거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 창출 →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해 생활문화양식, 문화자산과 경관을 기록, 보전하고 전승 필요
- (문화의 창조) 유.무형의 지역문화자산은 지역의 회복과 재창출의 중요한 요소이자 동력 → 지역재생 등 지역활성화 전략은 '문화'를 매개로 추진

전환기의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본격 시행과 지역문화정책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이 2019년 만료됨에 따라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함.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가지는 의미와 주요 정책(안)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지역문화 정책의 주요 이슈와 방향 제시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지역이 처한 도전적 양상

-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역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다음 두 가지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 (1) '비도시권(농산어촌)의 과소화, 중심-주변간 격차발생 등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전통적 '과소·저발전 지역' 출현.
  - ➢ (2)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쇠퇴지역' 발생의 문제
- 전자의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고질적 지역문제이며 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진입, 경제산업 재구조화로 일컬어지는 후기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에서 비롯된 문제로, 우리나라는 이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 현재 우리의 '지역'는 지역의 차별적 낙후 및 지역간 격차와 함께 광범위한 지역 '쇠퇴'의 위기 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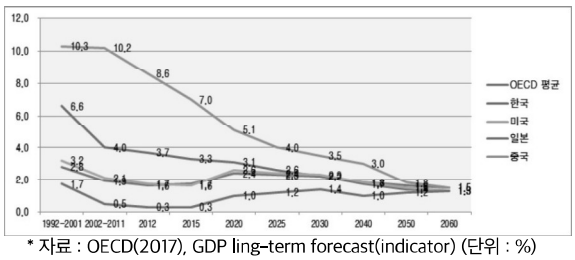
➢ 이로 인해 (1) 인프라와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로 국민의 경제활동, 생활 전반에 걸쳐 불균등 발생, (2) 지역의 쇠퇴로 인해 사람과 역사.문화.공간을 둘러싼 '관계'의 단절 발생과 이로 인한 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의 훼손 우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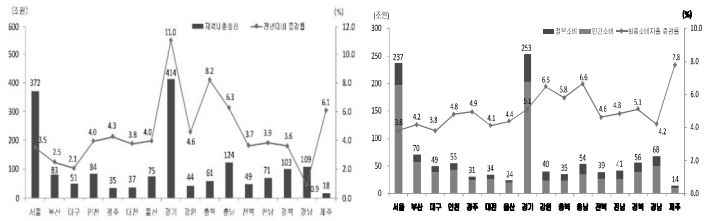
경제

- (경제)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지역간 격차 심화
- (경제성장률) 2000년대 초반 5% 대 → 2020년 2.1% 수준 (OECD, 2017)
- (지역간 경제 격차)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의 50.3% 차지 (2017년 현재, 통계청, 2018)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2060년대까지)

* 자료 : OECD(2017), GDP long-term forecast(indicator)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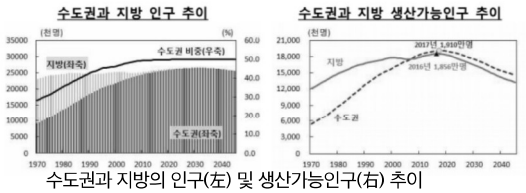
지역 내 총생산 규모와 증감율(左)과 최종소비지출 규모 및 증감율 (명목, 2018), 통계청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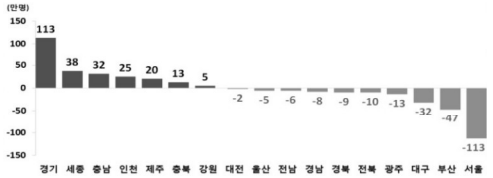
인구·사회·문화

- (인구)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 저출산의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
- 전반적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전 지역에 걸쳐 인구감소 예상 (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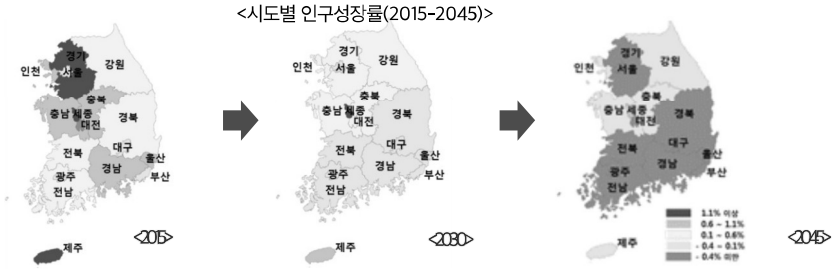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左) 및 생산가능인구(右) 추이



2015 대비 2045년 시도별 총인구 증가

<시도별 인구성장률(2015-204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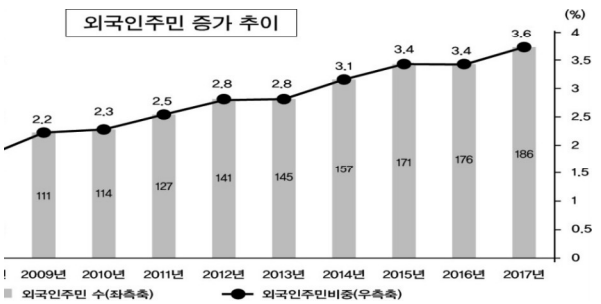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인구·사회·문화

- (인구) 다문화사회 도래

-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총 인구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2007년 1.5%(722,686명)에서 2015년 3.4%(1,741,919명)으로 증가
-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언어와 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 높음.

< 국내 외국인주민 수 추이 (2009-2017) >



자료: 행정자치부(2018)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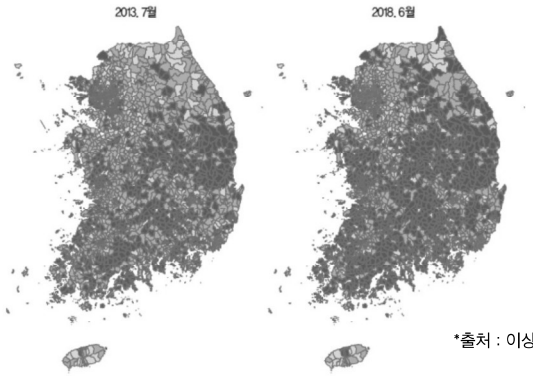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인구·사회·문화

● (사회·공간) 지역쇠퇴와 생활권의 위기

-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지방의 쇠퇴, 이를 넘어 지방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 등장
- 2018년 6월 현재 소멸위험지역 (읍면동)은 전체 3,463개 중 1,503개로 43.3%에 달함. 특히 비수도권-도 지역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의 비중이 70.1%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이상호, 2018)

< 전국 3,463개 읍면동별 지방소멸 위험 현황 >



*출처 : 이상호 (20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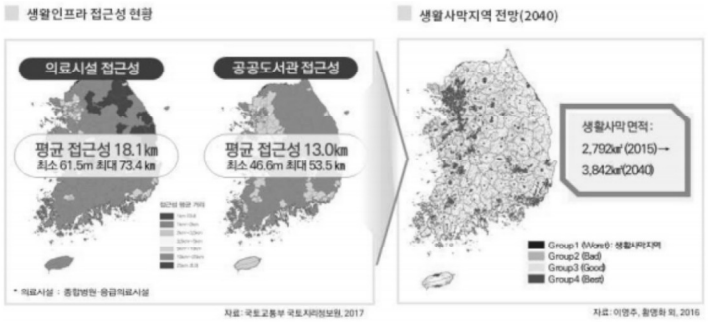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인구·사회·문화

● (사회·공간) 지역쇠퇴와 생활권의 위기

-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쇠퇴는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 감소, 인프라의 노후화와 쇠퇴화를 초래하여 생활인프라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확대 우려 (생활사막의 확대 및 고착화)
- 인구감소 → 생활인프라 시설 수요 감소 → 생활인프라 시설공급 저조 → 생활사막 (Life Desert) 고착화 전망

< 생활사막지역 전망 (2040) >



*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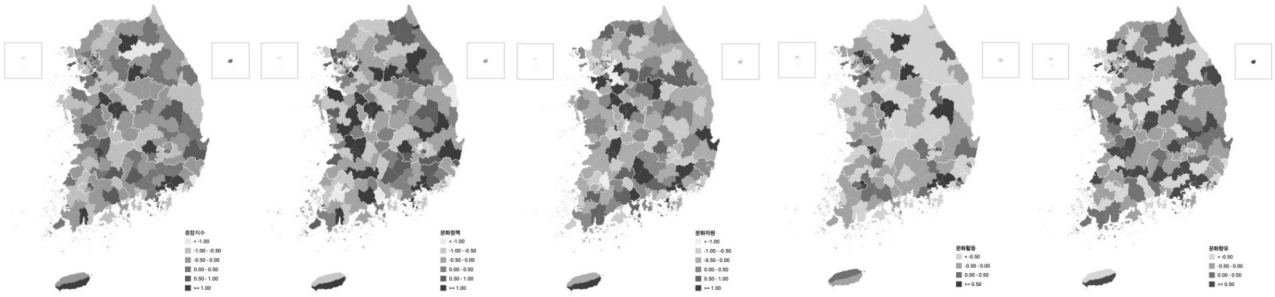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인구·사회·문화

- (문화) 문화서비스 및 향유 격차

➢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결과

- 재정자립도, 도시·농촌 간 문화서비스 공급 및 향유 격차 발생.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인구 및 기능이 지속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종합지수> <정책지수> <자원지수> <활동지수> <향유지수>

< 지역문화지수 비교분석 (2017년 기준)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정책 환경

- (국가 미래비전)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미래비전 수립에 착수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미래비전의 세 가지 원칙으로
'포용', '혁신', '평화'를 제시

- (포용)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의 원칙하에 민주주의를 더욱 신장하고, 고용안정, 소득증진, 교육기회 확대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기본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혁신) 창의적 학습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적자원을 축적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경제로 전환

※ "포용"과 "혁신"은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사회보장과 혁신경제가 융합하는 활력 있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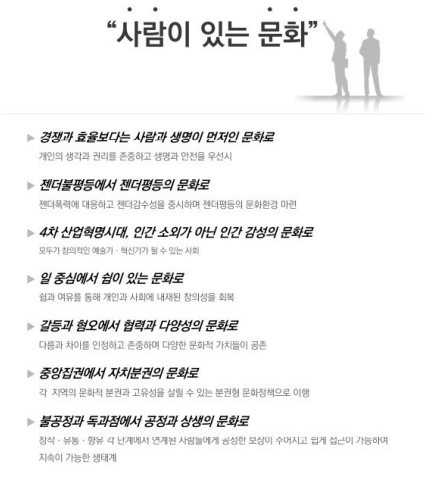
- (평화) 안보와 상생의 균형 잡힌 포용정신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모범국가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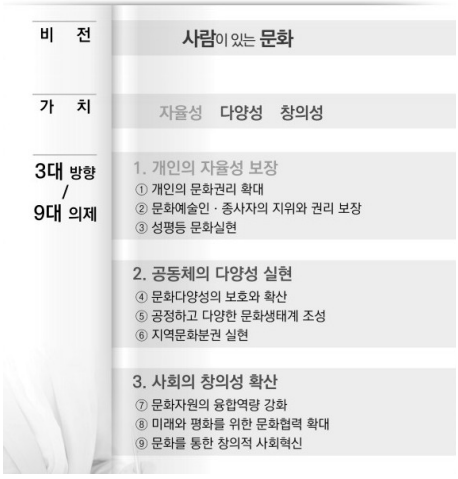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정책 환경

● (문화비전)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국민이** 직접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을 구체화하는, **최초의** 문화비전
-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와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
-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문화비전 **제시**





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정책 환경

● (글로벌의제) UN SDGs, 해비타트 III, UCLG 등 국가, 지역 및 문화 관련 국제사회 의제

UN SDGs

UN 지속가능 발전목표 2016-2030 (SDGs)

- 2015년 말 종료된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2015년 유엔총회에서 2030지속가능발전목표 SDGs)가 채택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6년부터 '30년까지 15년간의 이행기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 이래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

해비타트III

해비타트 III : 도시로의 권리 (Right to the City)

- 해비타트 III의 정식 명칭은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유엔회의(The UN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임.
- 2016년 UN Habitat III는 UN SDGs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 공간 조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Culture21 Actions'(2015)

-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UCLG)은 지속가능도시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강조
- 2004년 지역문화정책, 인권,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참여민주주의, 평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Agenda 21 for Culture'를 채택

14

Ⅱ. 지역을 둘러싼 도전과 대응

지역의 여건 및 문화정책의 대응

지역의 여건			지역문화 정책의 대응
지역을 둘러싼 도전	경제	• 성장률 둔화와 **지역간** 격차 • 기술혁명과 대안경제(사회적 경제)	• **지역** 내 문화소비 **위축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 지역문화 정책 대응력 강화 • 문화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인구 사회 문화	• 저출산·고령사회 • 다문화사회 • 워라벨 시대 • 문화서비스 및 향유 격차	• 생활권 **중심의** 문화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 •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강화 • 지역간 문화서비스 및 향유 격차 해소
	지역 공간	• **지역쇠퇴와** 생활권의 **위기**	•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발전 • 지역간 균형 있는 국민의 삶의 질 보장 • 지역쇠퇴에 대응한 문화적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문화의 기록과 전승,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
정책 환경		• 혁신적 포용국가/자치분권 • 사람이 **있는** 문화 • **지속가능발전목표**	• 문화자치 분권 및 균형적 지역문화 정책 강화 • 지역문화 정책추진의 민간참여 확대 및 참여방식 다양화 • **지역문화** 환경의 포용성과 형평성 확보 • 보편적 권리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권리 **및** 다양성 보장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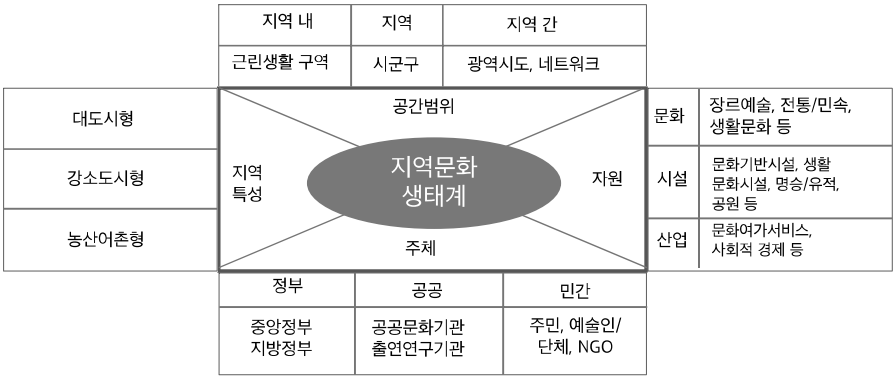
Ⅲ.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

지역문화의 개념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호 정의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무형, 유형의 문화적 활동

정책 대상 및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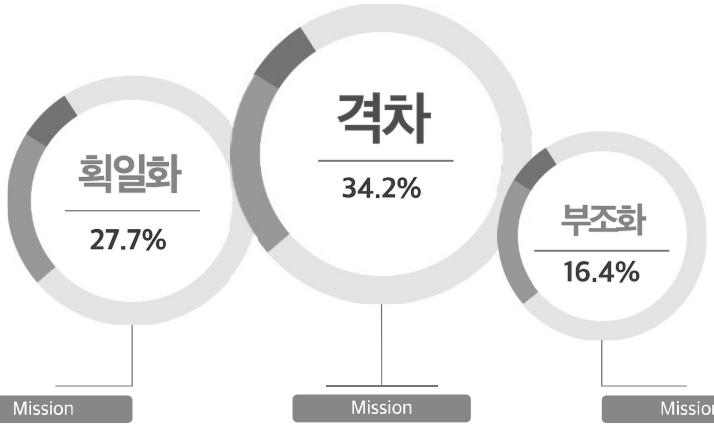


16

Ⅲ.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

지역문화 현안 문제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토론회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19.7~9, 총 342명 응답)



Mission

- 문화다양성의 존중
- 지역문화의 고유성 보존과 창의력 **제고**

Mission

- 재정, **시설** 등 여건 격차해소
-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예술

Mission

- 일과 삶의 균형
- 전문예술과 생활문화의 조화
- 중앙-지역, 민-관의 조화와 협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Ⅲ.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

계획의 방향

- 문화자치·분권과 문화적 균형발전 추구

**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견지하여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낙후·쇠퇴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적극적 지원 추진**

- 지역을 근간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

**촘촘한 '생활 속 문화 환경' 조성으로, 어느 개인과 지역도 뒤처짐 없는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

- 문화를 통한 혁신적 지역발전 모색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의 존중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혁신과 내생적 발전 추구

Ⅲ.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

계획의 핵심가치

● (자치) 지역 주도의 자치 분권형 지역문화 진흥 (자율성, 참여성, 신뢰성)

- 국민주권시대 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조응,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문화정책체계 를 구축
- 상대적 낙후·쇠퇴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강화로 문화자치 역량강화 모색

● (포용)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로 국민 행복과 화합에 대한 열망 부응 (다양성, 연결성, 융합성)

- '포용적 **지역문화정책'이란** 개인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원** 혹은 **지역 등에** 상관없이 문화 창조·향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조치되는 정책을 의미
- 모두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모두가 창조하는 예술을 지향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 추구와 공동체 화합을 지향

● (혁신) 문화를 통한 경제·사회혁신으로 지역의 새로운 도약

- 문화는 경제·산업·기술혁신은 물론 사회혁신을 견인해내는 중요한 자원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를 통한 지역혁신 (창업·창직, 사회문제해결), 나아가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

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Ⅲ.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안)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 목표

(목표 1) 문화자치·분권의 원리로 '내가 만드는 지역 문화'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추구**

(목표 2) 포용의 가치로 지역에서 실천하는 '모두가 누리는 지역 문화'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화 인프라의 조성 및 관련 사업 지원으로 국가의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 영위 추구

(목표 3)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 문화'

지역문화의 독창성, 고유성 강화와 이의 혁신적 활용으로 공동체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20

Ⅲ.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안) 비전 · 가치 · 목표

비전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가치 · 목표

자치	포용	혁신
지율성참여성신뢰성	다양성연결성융합성	내생성지속가능성

분권과 자치의 원리로 지역문화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내가 만드는 **지역문화**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

Ⅲ.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방향

전략 및 정책과제 (안)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안) 전략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 지역문화 협력 전달체계 개선 • 지역문화 재정 확충 • 지역문화 역량 강화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 취약지역 문화 접근성 향상 •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3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 · 활용	•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존 •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활용 강화 • 창조적 지역 콘텐츠 · 관광산업 육성 •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 문화적 지역재생 · 활력 증진 • 공간 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Ⅳ. 2020년 지역문화 이슈와 과제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후속조치 및 이행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발표와 함께 계획 추진 및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2020 ~)
- (중앙정부) 지자체의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가이드라인, 컨설팅 등), 계획 내용의 구체적 사업화, 이행 지표 마련 및 정기 이행 평가 등 후속 조치
- (지자체) 지역 차원의 상향식 계획 수립 체계 구축, 중장기적 관점의 실효적 시행계획 수립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 본격화, 생활SOC 확충 등 현안 대응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중심으로 2020년부터 지방이양 확대 예상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생활문화시설을 제외한 문화시설 조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등의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 사무로 전환).
  - 지역 차원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의 경제사회적 가치 확산과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 필요
- 시설 공급 기준과 방식, 서비스 내용 및 운영 방식 등 문화 관련 생활SOC 수급에 관한 정부-지자체 공동 대응 필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Ⅳ. 2020년 지역문화 이슈와 과제

문화도시 원년, 지속적 성과 확득을 위한 조치

- 2020년부터 1기 법정 문화도시와 2기 예비도시 (2019.12.30) 지정으로 사업 본격 추진
- 문화도시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문화도시 간 성과 공유, 문화를 통한 도시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모색

체계적인 지역문화 정책 모니터링 및 공유 추진

- 2차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정책의 실천력 강화와 경제·사회적 효과의 진단을 위해서는 정책 현황 파악,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이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진단 지표 개발 및 정기적 모니터링 추진 필요
  - '지역문화현황통계' (지역문화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점검하되, 지자체 차원의 자체 진단 지표 개발과 이의 정기 모니터링을 추진
- 모니터링 결과는 정부-지자체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대외 공개를 통해 정책 투명성 제고, 정책 성과의 대내외 확산

감사합니다.

제2섹션 토론

발표 Ⅱ 2020 지역문화 이슈와 방향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토론 1

김성하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문윤걸 | 완주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장, 예원예술대 교수

토론 3

최혜자 |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문화자치, 선언적 의미에서 실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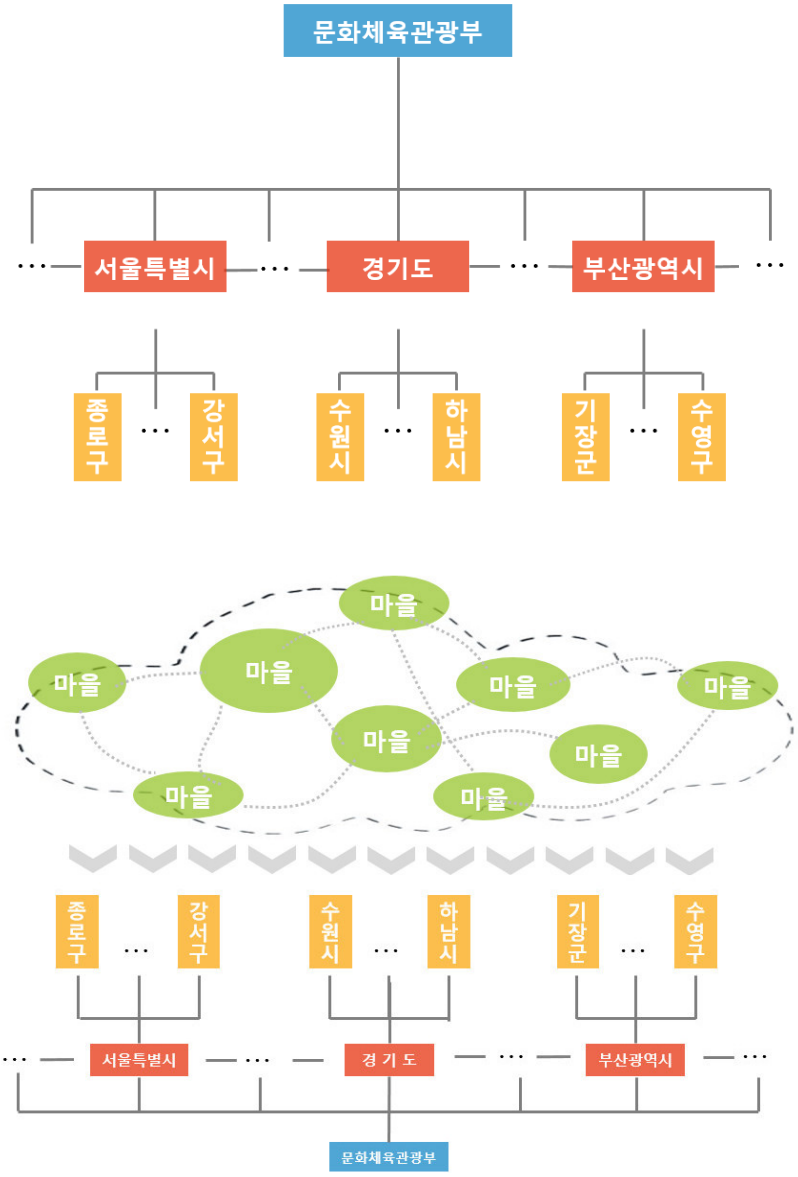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 2020 지역문화 이슈와 방향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발표문은 2020년 1월 현재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출범 포럼을 통하여 ‘문화’와 관련된 모두가 - 토론자 본인을 포함하여 - 보다 진중한 고민과 사유를 기반으로 발전적 토론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생각하며, 그 사유의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핵심가치는 자치, 포용, 혁신이다. 특히 자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도의 자치분권형 지역문화진흥’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주도’, ‘자치분권’, ‘지역문화진흥’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그 의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과거 ‘지방’이라는 용어가 중앙 혹은 중심에 대한 주변부라는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이라는 용어를 내면적 주변성을 담보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자치, 분권과 문화적 균형발전 추구’에 따르면 ‘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견지하여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낙후·쇠퇴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문화자치·분권이라는 한 축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한 축을 통하여 ‘지역주도의 자치분권형 지역문화진흥’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역문화를 지역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선언적 의미가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적시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르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군·구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서 국가 중심의 가장 전형적인 top-down 방식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하향식 수직적 위계구조를 마을을 중심으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로의 하향식 구조로 전환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문화자치가 시작될 수 있다. 즉 마을이 '위'에 있고 국가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래'에 있는, '마을-기초-광역-중앙'이라는 분권과 자치의 top-down 추진체계로 발상의 전환을 이룰 때 비로소 bottom-up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 진다[8)]



문화자치를 위한 발상의 전환의 첫 단계는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이 아닌 기본방향만을 수립하고 - 예를 들면,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기본방향(문화자치분권과 문화적 균형발전 추구, 지역을 근간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 문화를 통한 혁신적 지역발전 모색) - 이를 반영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각각 다른 기본계획을 종합하

8) 김성하,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 발. 「이슈&진단」 제320호. 경기연구원

여 국가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문화자치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수립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국가 기본방향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는 각각 시·도의 특성이 반영된 서로 다른 기본방향을 수립할 수 있고 이로부터 시·군·구는 마을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각각 다른 시·군·구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시·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한 국가 단위 기본계획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수립되어야 최소 단위 마을과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이 반영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 결국 시·군·구 내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시민 등 모두가 참여하여 그들이 속한 마을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이 위에 있고 중앙정부가 아래에 있는 분권-자치의 top-down체계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9)]

간략하게 언급한 문화자치를 위한 발상의 전환과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은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핵심가치인 '자치'가 선언적 의미에서 실천으로 도약하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9) 김성하,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 발. 「이슈&진단」 제320호. 경기연구원

토론 2 문윤걸 | 완주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단장, 예원예술대 교수

1. 제2섹션 발표문,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지역사회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역문화도 쇠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지적은 모두 동의할 수 있다.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화를 둘러싼 도전과 그에 대한 대응노력(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포함하여)들의 기본방향 등에 수긍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려 한다.

1)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상 문화자치, 문화분권 확대를 위해 중요한 문화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방이양하는 것이 지역문화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예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지방이양)

2) 지역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의 고유성,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는 문화도시사업에서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이 자칫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이해되어 문화다양성, 포용의 원리와 배치될 위험성은 없을까?

3) 혁신의 한 방향으로 제안되는 문화분권의 원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역문화 현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닐까?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사업운영방식은 바람직한 것인가?

2. 추가로 제기하는 지역문화 이슈 : 문화활동가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

1) 문자 그대로 '문화다양성'의 실천

: 문화다양성은 이주민이나 문화적 소수자 중심의 다문화정책, 문화복지적 차원 보다는 창조적 행위의 다양성, 창의적 활동의 다양성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문화적 장르나 소재, 대상, 활동방식, 기대효과 등을 전제로 한 선택과 집중 방식이 아닌 기존의 정책범위나 지원 틀 바깥에 있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성, 자율성, 즉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2)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시스템 구축

: 발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지역문제 해결, 지역혁신'이 실현되려면 지역문화는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 문화재단 만의 정책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협업구조로 동원되는 시스템에서 전개하는 정책대상이 되어야 할 것(예 : 4차산업혁명 대응노력으로 세계 주요기업들은 신제품의 개발에 앞서 기업 시스템 재구축에 더 몰두). 지역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3) 문화활동가 행복지수 높이기

:지역주민의 행복 못지않게 이에 기여하는 문화활동가의 행복도 중요, 대부분의 문화정책은 주민의 문화향유, 체험, 교육의 확대를 위한 인프라, 콘텐츠, 프로그램의 확대 중심으로 전개되고 이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활동가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하며 지속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음.

* 2012년 11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제3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하고, 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매 3년마다 장관 및 단체장이 준수율을 조사 공표하게 함)
* 2019년 7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위원회 통과(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 신설)

4) 사업은 지원하나 사람(창의성과 상상력)은 지원하지 않는 보조금 제도의 개선

: 문화사업은 대부분 보조금에 의해 실행됨. 문화사업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토대로 하는 기획역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데 보조금은 이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또 사업의 성격상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임에도 자부담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무임금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

5) 다양한 활동기회와 여건의 보장

: 문화분야는 특성상 비상근, 비전임, 프로젝트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활동가들이 대부분. 산업분야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공적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문화분야의 일자리만큼은 경영효율화 등의 명목으로 축소하는 것을 당연시함.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인 프로젝트에도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듯 문화활동가 개인 또는 지역문화인력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설, 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함.

지역의 삶과 관계가 창작될 때, 진정한 지역문화가 시작

1.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등장한 “포용”이라는 단어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큼.
- 이러한 기조 하에,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임.
- 다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그냥 정책수단을 나열하거나 지금껏 나온 정책들을 세트화 시키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임.
-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키워드를 제기한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이라는 게 있을까? 정책수단을 통해 영향을 주고자하는 지역의 집단은 누구인가? 시민들에게는 어떤 프로세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 위 대목에서 영민한 분들은 ‘본 토론자가 사람, 창작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보다’는 짐작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스포일러 주의보 발동함.

2. 정책의 주어는 누구인가?

- 대부분의 정책이 그러하듯, 포용과 혁신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주어가 정부인지, 지역인지(명확하지 않지만 좌우간), 개개인의 시민인지 불분명함.
- 물론,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도 알고 있음. 정부가 이리저리하겠다고 해서 지역문화가 포용과 혁신의 신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자체(지방정부라고 쓰고 싶었음)가 포용과 혁신의 키워드를 가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함.
- 이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문화역량, 자치역량, 지역사회공론화 역량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 역시 마땅함.
- 그리하여 포용과 혁신 행위가 시민주체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베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지역문화정책의 최종 수렴지점은 결국 지역의 시민이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고민하는 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출현은 지극히 반길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음.
- 결국 지역의 문화주체들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책이나 논의의 배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활동의 지원역할을 위해 연구, 정책개발, 문화비평 등의 활동이 요구됨.

3. 그러나 결국 새로운 문화는 주체들의 새로운 실험을 통해

- 지역문화는 뭔가를 지역에 배달하는 것은 결코 아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는 것임.
- 그렇다면, 문화 분권과 자치는 이와 같은 활동 여건과 방법, 가능성을 해석하는 가운데 구현될 수 있을 것임.
- 기존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는 일과 오늘의 삶과 상상을 창작(발견, 재구성, 표현, 세련화, 연결....)하는 일은 전혀 다른 영역의 활동임.
- 일반적으로 지역문화를 전통문화 중심으로 사유하거나, 서울에서 하는 행위를 지역에 이식하는 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문화 분권과 자치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여 활동하는 일이 되지 못함.
- 그것이 어려운지 알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를 재미있게 즐기는 기획의 힘일 것임.
- 문화·예술 활동에는 무의미한 행위는 있어도, 실패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실컷 실패를 즐기는 문화적 포용을 즐겼으면…….

제3섹션

발표 Ⅲ 문화통계, 빅데이터와 지역문화재단

백선혜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출범 포럼〕

문화통계, 빅데이터와 지역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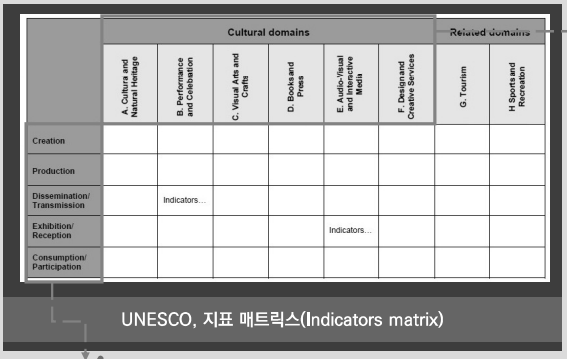
백선혜
2020.01.30.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I 국내 문화통계 현황과 이슈

세계적으로 문화통계는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구조화한 유네스코 프레임워크에 기초

세부영역 및 지표 등은 국가/도시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



UNESCO, 지표 매트릭스(Indicators matrix)

문화영역은 아래의 6개로 구분

- 역사문화 유산(문화재)
- 공연예술
- 시각예술
- 문학예술
- 영상예술
- 디자인 및 창의적 서비스

문화순환주기(culture cycle)를 기반으로 구분

- **창작:** 원작성을 갖는 아이디어 콘텐츠 창작(작가, 조각가 등 문화인력), 유일성을 갖는 상품제작(공예, 미술품 등)
- **생산:** 복제가능한 문화상품(TV프로그램), 창작에 사용되는 물건, 인프라, 프로세스의 생산(악기제작, 신문인쇄 등)
- **보급:** 대량생산된 상품을 소비자 혹은 작가에게 전달(영화배급, 음악이나 컴퓨터 게임의 도소매 등)
- **전시·발표·전승:** 현장성에 기반한 문화체험 제공(축제, 이벤트 등)
- **소비·참여:** 문화상품의 소비행위, 문화 활동 경험 등 (※참여의 경우 인식에서 소비까지 확대하여 파악)

세계적으로 문화통계는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구조화한 유네스코 프레임워크에 기초

우리나라 역시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영역 및 지표 등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적용

[유네스코 프레임워크로 살펴본 정부의 문화통계 체계]

<table>
<tr><th>분야
문화순환주기</th><th>공연</th><th>미술</th><th>문화산업</th><th>지역문화</th></tr>
<tr><td>창작</td><td rowspan="3">공연예술실태조사</td><td rowspan="3">미술시장실태조사</td><td rowspan="3">콘텐츠산업통계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사업실태조사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td><td rowspan="3">지역문화현황통계
국가도서관통계</td></tr>
<tr><td>생산</td></tr>
<tr><td>유통
(보급·전시·발표·전승)</td></tr>
<tr><td>소비</td><td colspan="4">문화향수실태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일부)</td></tr>
<tr><td>인프라</td><td colspan="4">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예연감, 문화재 관리현황</td></tr>
<tr><td>기타(주체, 인식 등)</td><td colspan="4">예술인실태조사
문화다양성조사</td></tr>
</table>

* 조사통계는 주황색으로 표시

중앙정부의 문화통계 구축현황

- **문예연감 (보고통계)**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보고통계)**
- **문화향수실태조사(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공연예술실태조사**
- **예술인실태조사**
- **미술시장실태조사**
- **문화다양성조사**
- 대중문화예술사업 실태조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계에 의존하는 구조

지역문화분권의 흐름 속에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 강화

[유네스코 프레임워크로 살펴본 서울시의 문화통계 체계]

- 지역문화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단위 통계의 필요성 증대
- 전국단위 통계는 전국 수준의 문화생태에 적합한 자료로, 지역별 문화생태(창작–생산–유통–소비) 파악 곤란 (ex. 창작주체와 공간, 민간부문, 지역문화 부문 미흡)
- 조사의 비효율성: 유사 조사를 다양한 주체가 실시
- 문화통계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 조사 또는 통계 간 연계분석 및 정책적 의미 해석 곤란

우리나라 문화통계체계가 처한 어려움

✓ 전체적인 문화현황을 보여주는 반면, 정책활용도 측면에서 한계

- 문화지표체계 설계 과정에서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
- 문제진단–정책집행–효과평가의 문화정책 과정별로 목적의식적으로 지표를 설계할 필요

문화정책 과정

문제 진단	•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진단 • 문제 확정시 정책 데이터 활용하여, 현황 데이터와는 다른 데이터와 연동하여 해석 가능 • 예) 시민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가?
정책 집행	•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관여 • 예산과 사업의 집행에 해당, 정책 집행 실적 데이터 • 예) A기관은 몇 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는가?
효과 평가	• 정책집행의 목적 달성 여부 확인 • 문제 설정과 직접적으로 연동, 문제 설정과 관련한 데이터가 구성되지 않으면 효과 평가 데이터 구성에도 어려움 • 추상적 문화정책의 효과를 구체화하여 보여주어야 함

출처: 김민규, 문화정책 데이터란 무엇일까, 「문화정책리뷰」, 2019.8.1.

우리나라 문화통계체계가 처한 어려움

✓ 문화통계의 표준화와 가이드라인 필요

- 문화통계 수집 대상과 범위, 지표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의 중복 및 연계 분석이 어려움

ex) 문화예술 관람 경험 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2018)	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2018)
• 전시회 관람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 박물관 관람 • 음악연주회 관람 (클래식, 오페라 등) • 전통예술공연 관람 (국악, 민속놀이 등) • 연극공연 관람 (뮤지컬 포함) • 무용공연 관람 • 영화 관람 • 연예공연 관람 (쇼, 콘서트, 마술쇼 등)	•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 미술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전시회 • 서양음악 (클래식, 오페라, 서양악기 관련) • 전통예술 (국악, 풍물, 민속극) • 연극 • 뮤지컬 • 무용 (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 영화 • 대중음악 (가요콘서트), 연예	• 미술관, 전시회 관람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 박물관 관람 • 음악공연 관람 (클래식, 오페라 등) • 무용공연 관람 (현대무용, 발레 등) • 전통예술공연 관람 (국악, 민속놀이 등) • 연극공연 관람 (뮤지컬 포함) • 문학행사 관람 (시낭독회, 도서전시회 등) • 극장에서 영화 관람 (TV, 컴퓨터를 이용한 영화시청은 제외) • 대중공연 관람 (쇼, 콘서트, 마술쇼 등) • 축제(야외행사 포함) 관람
문화예술 관람경험: 21.1%	문화예술 관람경험: 81.5% (영화, 대중음악 제외시 38.7%)	문화예술 관람경험: 75.6%

우리나라 문화통계체계가 처한 어려움

✓ 중앙-지역 통계의 중복성과 차별성

- 정부 조사만으로는 지역문화정책에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광역 또는 기초 단위에서 자체 조사 시행 경향
- 정부 통계 활용을 전제로 지역의 자체조사가 필요한 영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존재

자료명	조사대상 (조사모집단)	조사규모 (유효표본)	서울 표본수	조사 주기	조사방법	생산기관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문화향수실태조사	만 15세이상 남녀	10,000명	1,227명	2년	가구방문 면접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동조사	만 15세이상 남녀	10,000명	1,220명	2년	가구방문 면접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연예술실태조사 (2017년)	모든 공연시설 및 공연장	공연시설 1,019개 공연단체 2,861개	212개 1,286개	1년	멀티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실태조사 (2018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5,000명	933명	3년	가구방문 면접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술시장실태조사 (2017년)	미술시장 유통영역(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공공영역 223개	유통영역 308개 공공영역 180개	39개	1년	멀티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다양성실태조사 (2017년)	일반국민	2,100명	418명	–	온라인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수자	외국인근로자 300명 결혼이주민 300명 북한이탈주민 300명	70명 79명 42명		대면조사		
	지원정책/기반여건	17개 시도(2017년 대구 미제출)	–		행정자료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2017년)	사업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952개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541개	–	2년	멀티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종사자(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1,000명					

우리나라 문화통계체계가 처한 어려움

✓ 문화통계 관련 주체 및 역할이 혼재

- 개별 기관의 관점과 수요에 따라 문화지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향: ex)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문화지표, 도시정책지표, 세계도시문화리포트 등 기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표 생산
- 조사 간 연계성 부족으로 중복성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 발생

-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통계서비스에서 문화기반지표(문화공간 시설 수, 문화예술지원현황, 전문예술법인 지정단체, 예술인, 문화재, 박물관 현황 등)와 사회인식 및 실태지표(문화환경만족도, 문화활동 연간 방문횟수, 비용 등) 제공

자료명	조사주기	착수년도	자료수집방법
도시정책지표 중 문화영역 (서울서베이)	2년	2003년	행정자료 설문조사

자료명	조사주기	연구수행년도	자료수집방법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조사	비정기	2007년 2015년	행정자료 직접조사

- 2014년「서울문화지표 체계구축 연구」
- 2015년「2015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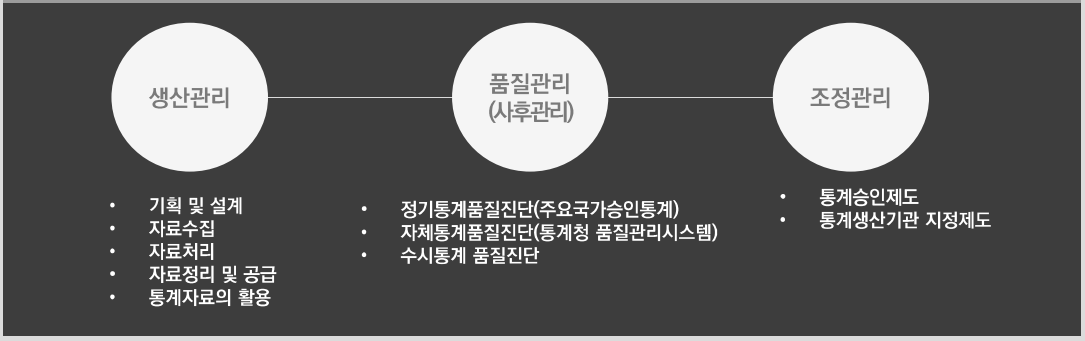
자료명	조사주기	착수년도	자료수집방법
서울문화지표	2년	2015년	행정자료 설문조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2년	2014년	설문조사

우리나라 문화통계체계가 처한 어려움

✓ 문화통계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관되게 담당하는 전담체계 구축 필요

- 서울시의 경우 통계 생산주체는 있으나 사후관리 및 조정관리 영역이 부재하여 통계수요 변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데이터 축적, 공유, 활용 등의 어려움

통계 관리체계의 3단계



출처: 이충희·김수경, 2018, "문화·관광 통계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II

서울문화통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조사(1차) 요약

조사 개요

- 목적: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기간 : 2019.05.22. ~ 2019.06.16.
-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내용: 문화통계의 활용여부, 서울시 문화통계의 장단점, 서울시 문화통계의 차별성 등
- 응답자 : 39명(문화분야 교수 및 연구자, 기초·광역문화재단 담당자 등)

서울시 문화통계 생산시 주요 고려사항

• 호환성	• 정부통계와의 호환성, 국제통계와의 호환성, 상위통계와의 호환성
• 구체성	• 지역별 비교(구별, 동별)가 가능한 세분화된 통계생산
• 협력	• 서울연구원,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의 유기적 협력
• 전문성/신뢰성	• 전문인력 관리, 통계의 시계열성과 신뢰성 확보
• 자료 공유	• 자료 접근성 개선(로데이터 공유)

전문가 조사(2차) 개요 및 응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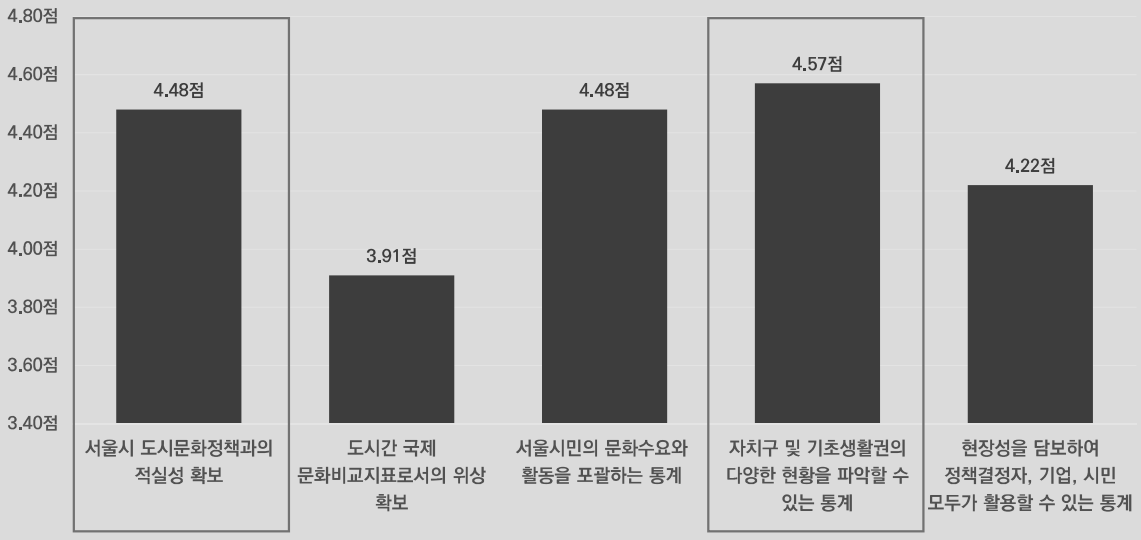
조사 개요

- 목적: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기간 : 2019.07.22. ~ 2019.08.02
-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내용: 문화통계의 활용여부,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와 차별성, 분야별 문화통계 생산의 필요성, 문화통계 운영 및 협력체계 등
- 대상 : 46명(문화분야 교수 및 연구자, 기초·광역문화재단 담당자 등)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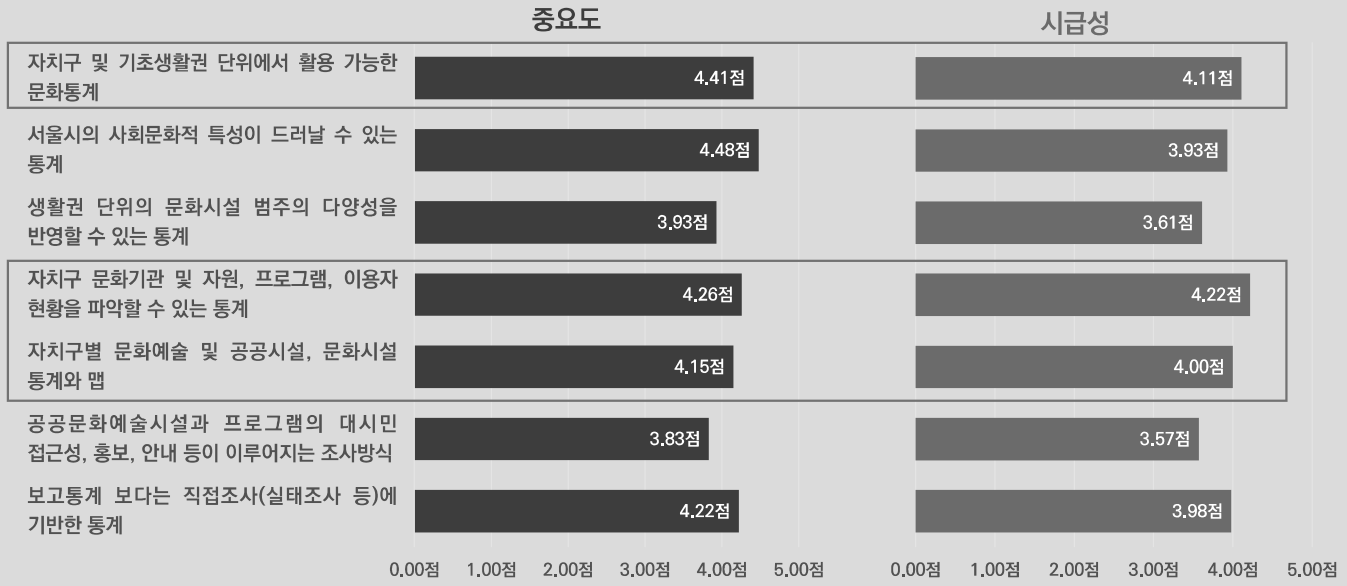
- 응답자의 37.0%는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이며, 10-15년미만(34.8%), 15-20년미만(17.4%) 순임
- 응답자의 연령은 50-59세(43.5%)가 가장 많았고, 40-49세(34.8%)임, 30-39세(15.2%)임

서울시 문화통계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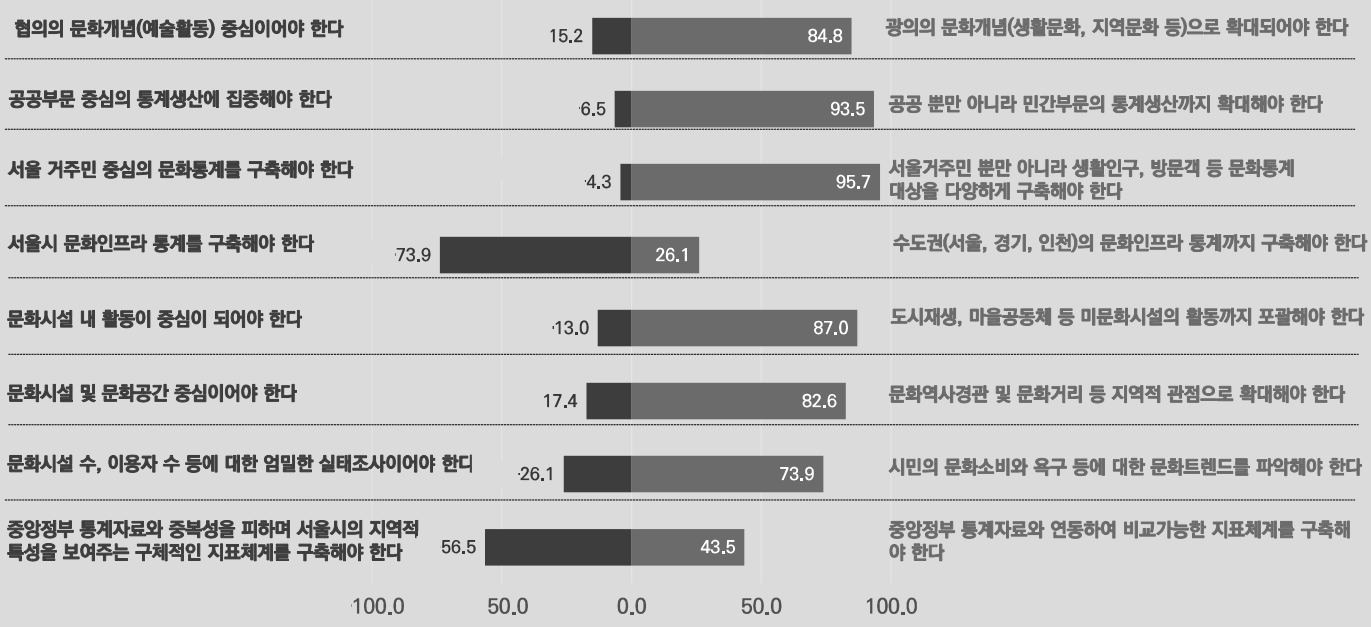
서울시 문화분야 통계 생성시,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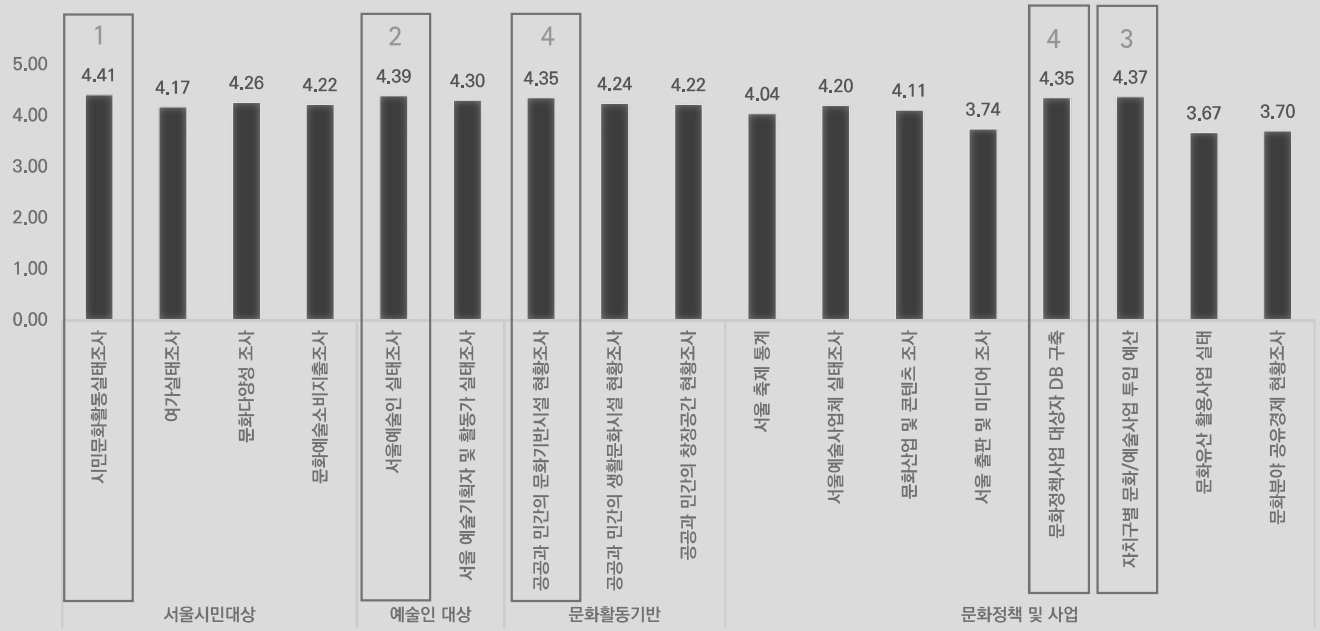
서울시 문화통계의 방향성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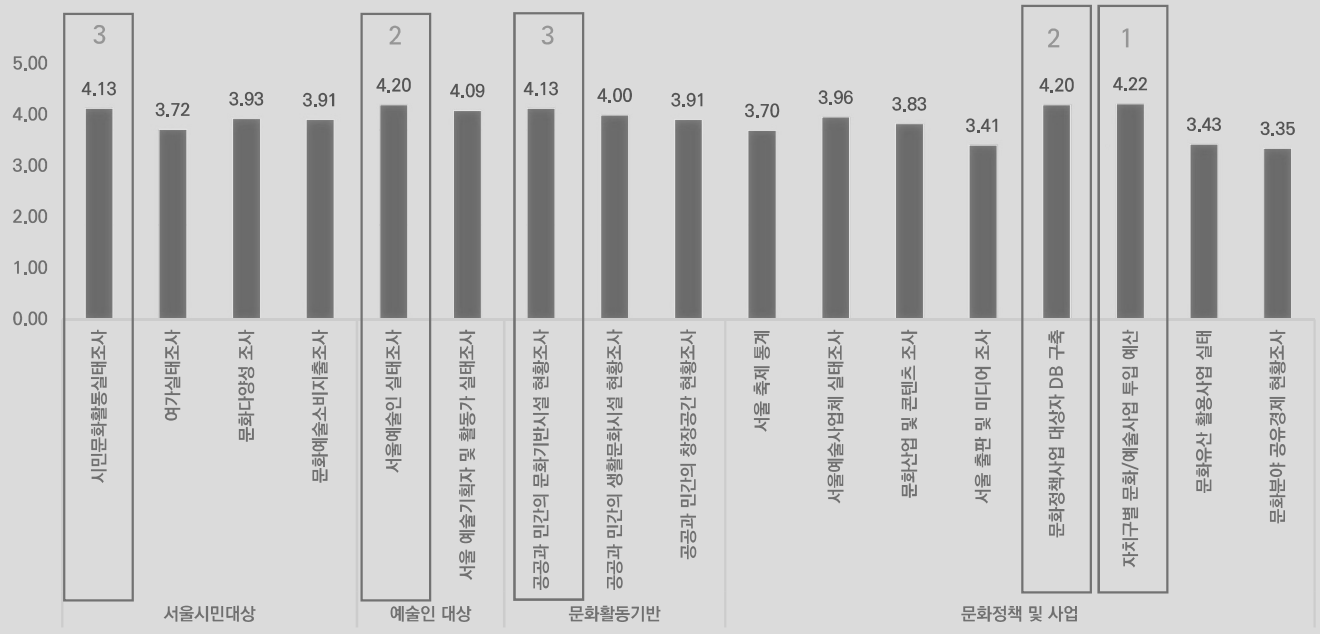
분야별 문화통계 생산의 필요성

17



분야별 문화통계 생산의 시급성

18



Ⅲ 지역문화통계의 구축 방향

지역문화통계 구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포괄성

- 문화의 개념과 통계구축 대상범위 확대
  - 예술 → 문화
  - 서울시 거주민 → 서울시 생활인구
  - 문화정책 내 → 지역적 관점에서 연관되는 정책
  - 공공 → 공공+민간
  - 문화시설별 활동 → 문화시설, 거리, 경관 등에서 일어나는 활동

정책활용성

- 문화생태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핵심통계 설정
  - 창작(생산, 제작), 유통(발표, 전시), 소비(인식, 참여)를 균형적으로 파악
  - 엄밀한 실태조사보다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경향성을 드러낼 수 있는 통계
  - 지역문화정책을 뒷받침하고 검증할 수 있는 통계
  - 지역(기초)별 비교, 분석이 가능한 통계

지역성

- 자치구 및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체계 구축
  - 지역의 고유한 문화특성과 문화지형 반영
  - 정부통계와 호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치구(기초)의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 통계 설계
  -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세분화된 통계 생산(권역별, 구별, 동별)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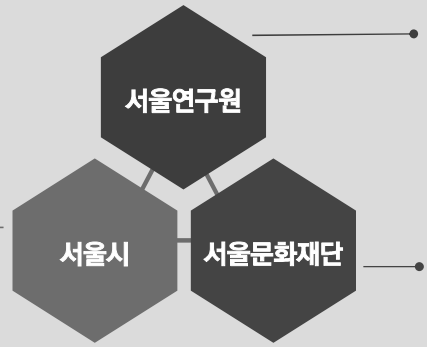
- 광역-기초문화재단 간 협력체계 구축
  - 통계생산관리-사후관리-조정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지리적 접근성, 분포 등 공간정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 기초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생산, 활용할 수 있는 상향식 플랫폼 구축

제안 1) 지속가능한 문화통계체계

(1) 광역 단위에서 문화통계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통계의 시계열성(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역할분담 예시]



서울연구원
- 문화분야 통계의 데이터 설계 및 관리
  - 지역통계 및 정부통계와 호환성 설계
  - 통계별 지표체계 개발
  -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정책통계 생산
- 통계수집 가이드라인 제공

서울시
- 근거 법령과 예산
  - 문화통계의 지속성과 정기성 확보
- 보고통계 생산

서울문화재단
- 조사통계 생산
- 기초문화재단과 협력체계 구축

제안 1) 지속가능한 문화통계체계

(2) 자치구(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 자치구 문화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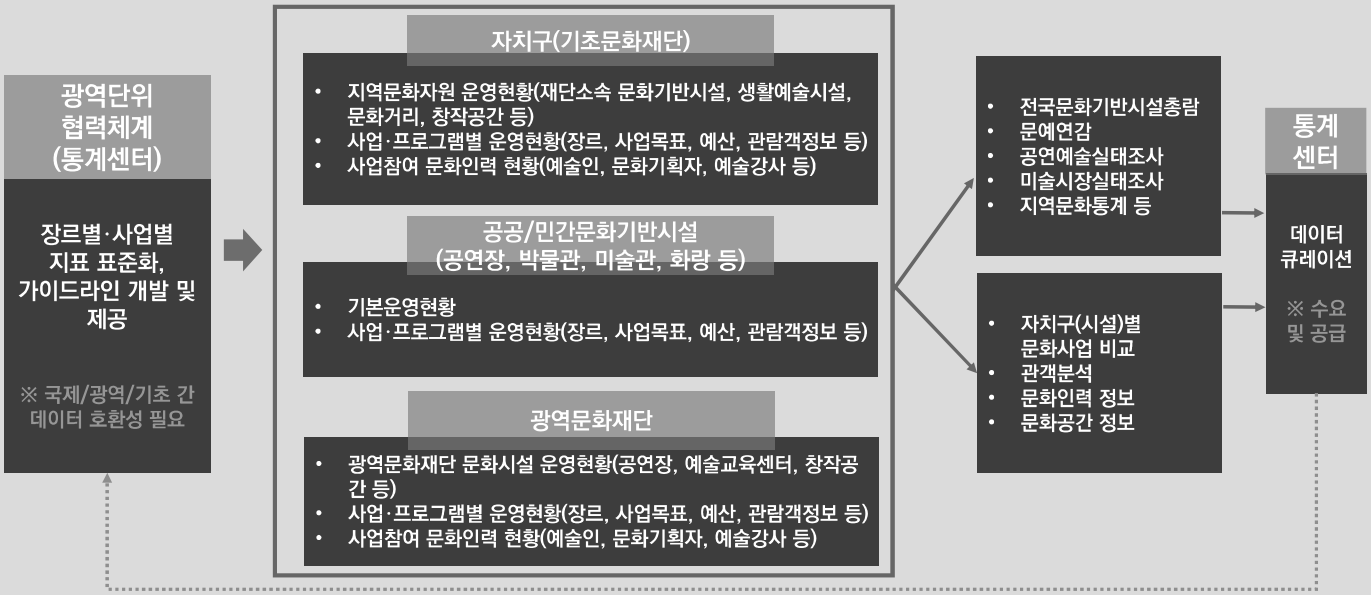
- 문화기반시설별 구체적 운영현황(장르별, 프로그램별 자치구간 비교)
- 관객(수요계층) 분석
- 문화정책사업대상자 DB(예술가, 예술강사, 문화기획자, 생활문화사업 참여자 등)
- 자치구별 문화/예술사업 장르별·사업별 투입 예산

☑ 필요에 따라 자치구별로 조사를 개별 시행하는 상황으로, 데이터 구축 및 공유 불가능

- 상향식 데이터 생산체계 구축
- 광역단위에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리(광역문화재단)
- 기초단위에서 조사 시행 및 생산(기초문화재단)

제안 1) 지속가능한 문화통계체계

자치구(기초문화재단)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한 상향식 데이터 형성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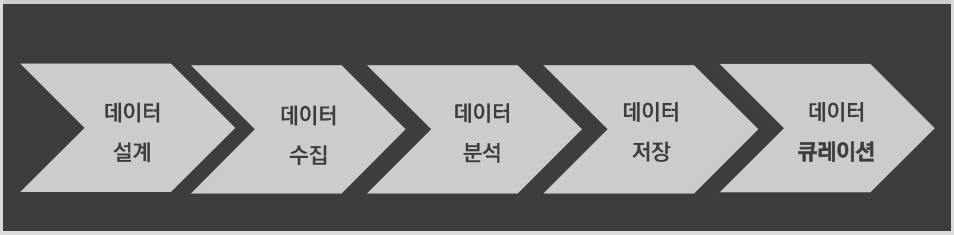


제안 1) 지속가능한 문화통계체계

(3) 지역별 문화통계센터 설립

필요성	통계수요 변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데이터 축적, 공유, 활용 등에 어려움 광역 단위에서 지역 문화통계센터를 설립, 조사 설계부터 관리까지 포괄하는 전담체계 구축 필요
역할	핵심통계 생산 및 해당 시·도의 전체적인 문화트렌드 제시 문화통계플랫폼 구축 및 문화통계생산의 가이드라인 제시, 데이터 축적과 관리 문화통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광역)문화통계센터의 역할



제안 2) 수요자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

(1) 지역문화통계플랫폼 구축

-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 관련 교육인, 학교 등의 정보는 개인 또는 조직에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데이터 공유 체계

  ※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과 연계 검토: 전국 기초단위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안 예정

캐나다의 예술 및 학습 네트워크(CNAL: Canadian Network for Arts & Learning)의 사례

구분	가입시 작성 목록
예술가 및 교육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 예술분야, 언어, 멘토 필요유무, 멘토 추천여부, 개인 레슨 필요 여부, 그룹 레슨(수업) 필요 여부, 학교에 서비스 제공 여부, 타 도시 학교로 이동 여부, 이동가능한 범위(이동거리),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어떤 집단을 교육하고 싶은지 여부, 교육 경험 기간 등
예술단체	예술분야, 프로그램의 가격(시간당 비용), 조직 유형, 학교 서비스 제공유무, 학교 프로그램 유형, 지역사회 프로그램 유형, 언어, 장소의 접근성(엘리베이터, 휠체어석, 청력보조장비 등), 어느 집단(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유무, 멘토십/레지던트 기회 제공 여부 등
학교	주소, 총교사수, 학생수, 평균 학급 크기, 예술전문학교 여부, 풀타임 예술직원 고용여부, 예술인력 고용여부, 직원을 위한 전문예술 개발 제공여부, 학교 위치 특성, 언어 등

출처: https://www.eduarts.ca/

제안 2) 수요자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

(2) 기초통계 또는 빅데이터와 연계 분석 (예시)

문화지출구조 파악을 통한 예술의 경제적 효과분석

서울시민문화활동조사 (기초자료 확보) + 소비통계 (카드데이터, 쇼핑몰 사용금액)

문화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 관계 분석

서울시민문화활동조사 (기초자료 확보) + 서울서베이 (사회인식)

데이터 전처리 및 사전평가(혼인상태, 학력 등 데이터 범주 재분류 후 데이터 연계 타당성 확보)
→ 데이터 연계(매칭: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 공통변수: 거주지역, 연령, 동거자녀수 등 / 성향점수 계산)
→ 데이터 연계 사후평가 → 분석

제안 2) 수요자친화적 문화통계 큐레이션

(3) 문화 이슈와 트렌드 분석리포트의 주기적 발행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시민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 긱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 남북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합작으로
-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Americans speak out about the arts

- 4년에 한번 18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예술과 건강, 문화시민의 삶, 직장에서의 창의력과 성공, 예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제3섹션 토론

발표 II 문화통계, 빅데이터와 지역문화재단

토론 1

김해보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토론 2

임영숙 |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수석컨설턴트

토론 3

이수철 |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과장

숫자의 힘을 이기는 해석능력을 키워야[1)]

당연한 변화, 환영하면서 우려한다.

보다 과학적이며 소통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문화통계 구축은 당연한 변화의 방향이고,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우선 연구 과제임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정책적 변화는 자칫 본질을 압도하는 형식적 변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에, 미리 부작용을 견제하는 의견을 덧붙인다. 그리고 통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연구자들의 역할에 대응하여 지역문화재단의 현장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안한다. 연구자들에게는 실증주의적 정책방법론으로의 전환에 앞서 문화와 정책이라는 사회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본다.

문화정책은 사실과 가치를 모두 소통해야 한다.

사회과학 연구로서 문화정책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방법론 고민이 필요하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문화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는 증거주의(evidence-based) 공공정책 기조 아래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설득의 언어로서 매우 높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숫자로 보고되어야 할 행정의 성과와 문화의 본질적 가치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통계수집과 지수화 과정에서 현장의 맥락은 소실되기 십고, 증거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당초 이념이 무색해지기도 한다. 사회과학으로서 문화정책연구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논증과 가치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동시에 가능한 이론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최근 행정학에서는 영국의 과학철학자 로이 바스카(Roy Bhaskar) 등의 비판적실재론(Critical Realism) 연구에서 논리증주의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방법론을 보완할 이론자원을 수혈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층화된 존재론에 기반한 비판적실재론의 이론을 활용하여, 신공공관리론의 존재론과 인식론적 오류를 비판하거나[2)], 실증주의 정책평가에 대한 실재론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연구[3)], 행정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분법 극복 가능성을 탐구한[4)] 연구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숫자의 힘은 강력하다.

---

1)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출범 포럼(2020.1.30.,수원 이비스 호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주최) "문화통계, 빅데이터와 지역문화재단"(백선혜)에 대한 토론문

2) 정책평가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비판적인 다원주의 방법론(critical realist evaluation)에 대한 고찰 (신희영, 2019,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2)) 등

3) 지방분권 시대의 대안적 교육정책평가 모델로서의 실제론적 평가 정말 쓸모 있는 교육정책평가를 위한 '이론적' 재음미 (이성회, 2018,, 한국교육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등)

4) 행정이론의 한국화를 위한 연구방법 및 이론화 전략: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의 극복(권향은, 2017, 한국행정학보(51/2)) 등

그만큼 부적절하게 해석되거나 사용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책에서 숫자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장의 실태조사(조사통계), 관계자의 인식조사(설문통계), 정책의 성과측정일 것이다. 그런데, 문화자원실태조사에서 한 연구원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찾으니 그 도시가 문화도시가 되어 있더라는 에피소드처럼, 정책이 정의한 체계 안에서 인식되는 것만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최근 시행한 서울시민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노년층의 문화활동 수준이 청년층을 앞지르는 결과는 일부 실제 변화이기도 하지만 설문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목표로 설정된 것만 조사하는 평가지표대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책성과통계는 공공행정가들이 실제 세상과는 괴리된 가상현실세계에 살게 할 수 있다. 통계와 관련된 이런 딜레마적인 부작용들은 단순히 통계체계와 운영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인식론적 한계가 근저에 숨어있다.

통계와 관련된 인식오류적 상황들은 문화재단의 업무 속에서 너무나 쉽게 목격된다.

(1) 산술합계와 종합 지수화 과정에서 하위 맥락이 소거되는 문제

: 지역문화실태조사와 지역문화종합지수의 지역 맥락 소거 사례

다양한 층위로 층화된 지역문화 세부지표들의 의미를 중앙정부에서 의미를 부여한 하나의 종합지수로 요약하는 것은 ‘평평한 세계를 상정한 인식론의 오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종합지수 산출 과정에서 각 지표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의미와 맥락을 수집한 정보는 사라진다. 따라서 지역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수립도 어려워지고, 증거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당초 이념이 무색해지기도 한다. 결국 종합지수로 전국 지자체의 순위를 매기는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이외에 지표조사와 지수화에 따른 다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인식론의 오류에 기반한 방법론적 오류가 철학적 딜레마로까지 이어지는 사례이다. 종합지수화로 지역문화 수준을 서열화하는 것은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 취지와 배치되고, 현황조사 결과가 정책성과 평가로 활용되는 것은,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역문화진흥이 필요하다는 조사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다.

(2) 입장객 숫자 등 실증적인 문화정책 성과의 과학적 측정 불가능성 문제

: 실증적 성과지표의 실제 측정불가능성

실증주의에 기반 한 정책 평가에서는 정량적 데이터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과 수집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공공문화기반 시설의 이용객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카메라나 무선신호를 이용한 보다 정확한 측정 방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문객’, ‘입장객’, ‘관람객’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주장이 있다(박근화・김지학(2019)) 미술관 마당에서 진행된 물놀이 프로그램 입장객 숫자가 연간 미술관 총 입장객 숫자를 압도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이다. 하지만, 이를 전시 관람 인원과 동일시하여 기관의 연간 운영성과로 합쳐서 발표한다면, 이 또한 층화된 실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숫자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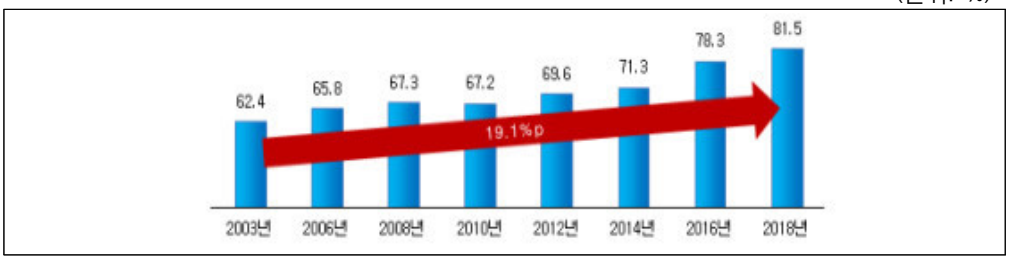
로 인식하는, 보다 근원적인 '평평한 세계관의 인식론적 오류'의 결과이다. 비판적 실재론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공공문화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문화서비스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실증적 증거로 채택되는 지표들이 층화된 세계를 평평하게 정량화하는 인식론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통계 이전에 소위 문화서비스의 가치의 '발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3) 점증하는 통계조사결과에서 느껴지는 정책의 인과력에 대한 집착 문제 : 통계조사결과가 주는 압박감과 인과성에 대한 오해

문화부가 2019년 2월에 발표한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로 2016년 78.3% 대비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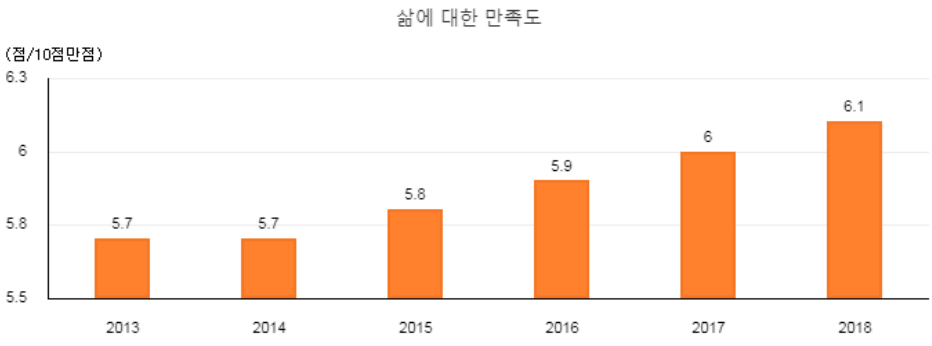
(단위: %)



그림출처 : 2019.2.11일자 문화부 보도자료

공교롭게도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2014년 이래 줄곧 0.1점씩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림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9)

두 통계 조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보다 이런 통계를 보는 행정관료들의 심리를 추정해볼

필요가 있다. 위의 통계지표와 관련되는 공무원은 저 지표들이 정책의 성과를 반영하는 듯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압박감을 준다. 행정가들의 심리상태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위와 같은 통계의 지자체별 순위를 본인들의 치적으로 홍보하기도 하니, 통계가 주는 압박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연구자에 의한 통계 자체의 (의도적) 오류 가능성은 차치하고, 통계조사 결과를 정책의 성과로 인식하는 정책가의 인식 오류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오해와 집착에서 기인한다. 가치와 효과와 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반드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타난 효과 또는 변화의 전체가 특정 행위에서 기인된 것일 때만 그것을 인과적 성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화관람 횟수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큰 문화향수 수준은 분명 공공 부문보다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다양한 영역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그나마 이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정책분야는 매우 한정적이다. 이처럼 개방체계인 현실세계에서의 변화가 특정 공공정책의 작용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히 우호적인 변화는) 정책의 성과와 등치시키려는 인식적 오류와 통계관리자의 압박감은 부적절하게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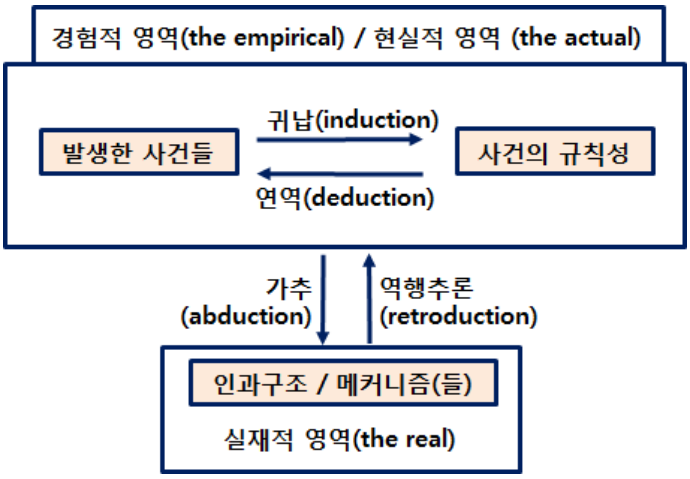
숫자 확보 노력과 동시에 해석력 키우기가 필요하다

통계의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조사된 통계 데이터의 변화와 정책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세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엄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실재론적 관점을 적용한다면, 개방체계의 변화를 표현한 통계에 대해 정책의 인과성을 주장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추와 역행추론 등 초월적 논증법을 사용하여 숨겨진 인과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성회(2018)의 지적대로, 실증주의에 기반 한 통계분석의 한계는 인과관계를 경험적 사건들 혹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의 '묘사'로 대체함으로써 막상 '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뭔가를 개선하는 정책적 개입은 관련된 현상과 행위주체들이 움직이는 원리, 즉 다이나믹스(동학, dynamics)를 알고 나서야 제대로 된 처방과 혁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로 발표되는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빈도만으로는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문화향수 빈도나 문화생활만족도를 통해 공공부문 문화정책 성공을 넌지시 암시하는 효과만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장애요소가 어떤 맥락에서 작동하는지 알아서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조사된 통계 자체에 대한 정책의 인과력을 주장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숨겨진 인과관계를 찾아서 문화활동과 그에 따른 가치가 생산되는 매커니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를 넘어 초월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는 귀납적 방식으로 우연적인 것의 규칙성을 발견할 뿐이다. 즉 시간상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인식주체가 인과성을 부여할 뿐이다. 실험실과 같은 폐쇄체계(close system)에서는 특정한 인과적 자극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개방체계(open system)는 둘 이상의 기제들이 함께 작동하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들이 연역적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도록 발생하지 않는다. 과학적 탐구는 단순히 사건들의 규칙적 연쇄를 발견하여 'A이면 B이다'로 일반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규칙성의 원인과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증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귀납적 논증에서는 관찰된 현상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관찰이 행해지는 조건들이 다양할수록 그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정확한 추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찰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즉 관찰 불가능한 사례는 추론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인간의 경험과 감각이 능동적 해석의 산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관찰에서 도출된 결론을 참이라고 '경험적으로' 논증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반면, 연역적 방법은 그것을 사용할 때 전제가 되는 보편법칙 또는 일반성을 갖는 지식 주장을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실증주의 경험론에 근거한 연구방법은 논증의 타당성에 입각하여 이미 존재하는 이론을 검증할 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경험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을 넘어서 관찰할 수

없더라도 세계에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실체들에 대한 추론과 이에 대한 초월적 논증과정을 통해서만 지식의 새로운 발견과 도약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과학적 탐구가 '가추(abduction)', 즉 왜 발생했을까, 발생시키는 시스템은 뭘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고, '역행추론(retroduction)'은 그런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발행하지 않을 여러 가지 대안적 조건들을 제거해나가며 가장 설명력 높은 가설을 채택해나가는 검증 방법이다.



그림출처 : 이기홍(2008), 서민규(2019)[5] 종합, 일부 수정

정책연구가 이미 발생한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일반화를 넘어서 사회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적 사회과학'을 지향한다면, "행위나 사회조직 같은 온갖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사건 X가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X이려면 무슨 속성이 존재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이 X를 가능하게 하는가는 사회를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정책을 기획할 때 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관찰(귀납)로부터, 담배 성분 중에 폐 악성종양을 발생시키는 속성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가추) 다시 경험적 관찰을 통해 그 물질의 존재와 작동기제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그 물질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병적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검사하는 과정(역행추론)을 통해서도 폐암 예방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연역과 귀납의 추론에는 논리적 추리능력, 통계 분석능력이 요구되었다면, 사건 발생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가추와 역행추론을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추상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추와 역행추론을 초월적 논증 방법이라고 부른다.

문화정책 연구에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계량화와 가치에 대한 철학적 논증 사이에서 매우 사려 깊은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 윤견수(2008)[6]는 행정학 연구방법론의 다원

5) 서민규(2019), 21세기 유럽의 실재론자들-메이야수, 페라리스, 바스카의 실재론 비교연구, 동서철학연구(91), 377-401
6) 윤견수(2008), 인문학적 성찰과 행정학 방법론,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화를 위해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문화재단의 일과 현장에서 숫자들과 의미 해석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통계들은 전형적으로 정책의 입장에서 조사설계와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이 중요한 통계들이다. 하지만 문화소비 현장의 흐름에서 정책에 참조할 시사점을 찾아내는 데는 이해 관계자들의 행동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가 중요해진다. 하지만 현재 지역문화재단이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창작자들과 관계 맺는 주요한 플랫폼에서도 빅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현재 돈의 흐름만 관리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이 빨리 참여주체들의 데이터를 누적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빅데이터는 이해관계자들의 “말”이다. 설계된 구조 대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으로 수집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해석하여 의미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역량이 바로 지역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 이제 막 새로운 숙제를 시작하는 마당에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기왕에 시작하는 걸음을 멀리 보고 내딛을 필요가 있다.

문화에 데이터를 입히다

2020.1.30.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임영숙 수석 컨설턴트 (문화콘텐츠 공학박사)

Copyright ⓒ DataMKT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was created for the exclusive use of DataMKTKorea.
It must not be passed on to third parties except with the explicit prior consent of DataMKTKorea.

DataMKTKorea 데이터마케팅코리아

"몸이 열 개여도 모자른" 47세 김소연씨

이용자

이용자가 생활하면서 생산해내는 문화생활 데이터

- **주중 저녁시간**: 육아, 가사 이후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검색
- **주말시간**: 아이에게 맞춰진 박물관, 축제방문, 영화관람
- **휴가기간**: 여름휴가 여행지 숙박 예약, 이동경로 검색하기, 식당 검색하기
- **재취업 준비**: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 활동을 위한 정보 검색

47대 김소연씨

몸이 열개여도 모자라

▸ PROFILE 약력

나이: 40대 후반
주요 문화 활동: 체육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주로 자녀 또는 배우자와 함께 즐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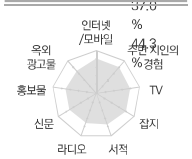
▸ 등급: ★☆☆☆ 무관심층

최신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중요하고 인터넷/모바일 채널을 주로 이용하며 주로 후기와 상세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

스마트폰 주 이용시간대

- AM 7:00 – 17.2
- AM 9:00 – %
- PM 12:00 – 20.8 %
- PM 3:00 – 32.8
- PM 6:00 – %
- PM 9:00 – 25.5

정보 수집 채널 만족도



주 경험 문화활동

영화/애니메이션 33.7%
체육 7.7%

문화활동 1일 평균 지출금액

1만원 ~ 3만원
지출금액 없음 12%

정보 수집 채널 1순위

인터넷/모바일
최신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

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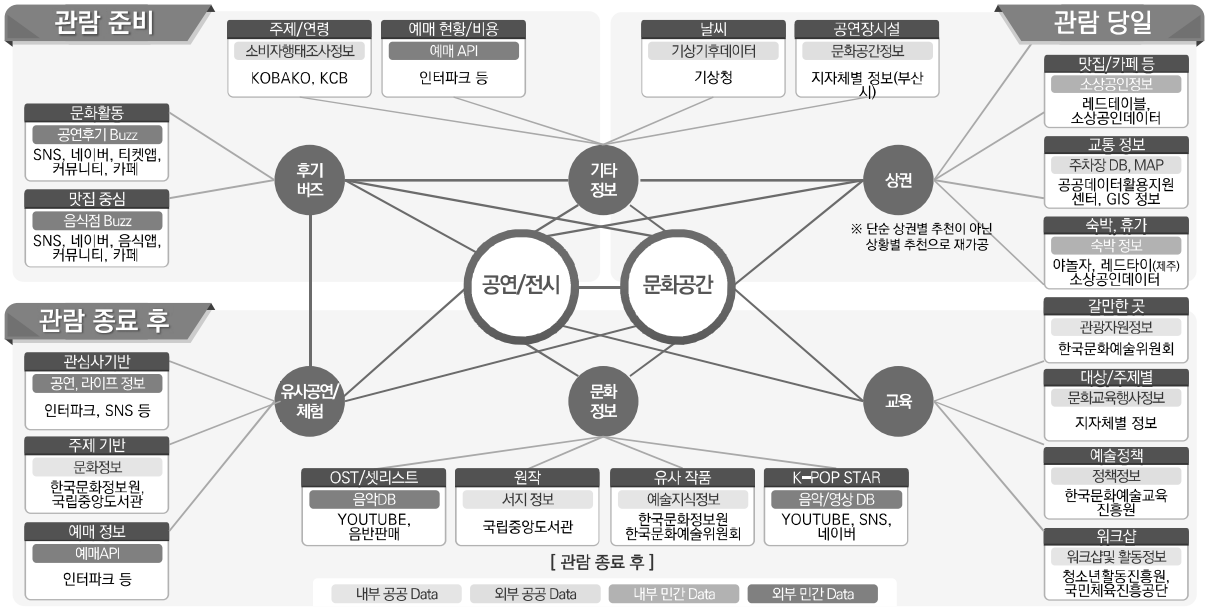
산업군에서 소비자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문화생활 데이터

- **키즈 시장**: 고객 특성을 고려한 키즈 콘텐츠 시장 분석
- **창업 컨설팅**: 연령별, 지역별, 성별 등 문화관람분석, 리뷰분석 등을 통한 마케팅 활용, 굿즈 상품 개발 등
- **관광 시장**: 시기별 인기 여행지, 세그먼트별 여행 구매력, 지역별 가격 격차 분석 등을 통한 상품 개발
- **교육 시장**: 재취업 성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안)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혁신서비스 모델(안)

흩어져 있는 문화 데이터를 단일화된 플랫폼에 융합해 제공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안)

3

DataMKTKorea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혁신서비스 "문화역세권"

문화 혁신서비스의 '문화 역세권' 디지털 영향력 지표로 문화 소셜 데이터 활용

내 주변 문화지도

출처: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www.culture.go.kr/bigdata

전국 축제 트렌드 지도

데이터 출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마케팅코리아

디지털 문화 역세권

데이터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데이터마케팅코리아

DataMKTKorea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소셜 데이터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

Digital CDJ

Need Recognition → Show Interest → Evaluation of Alternatives → Decide Purchase → Purchase & Evaluation

Channel Analysis

검색	홈페이지	BUZZ	SNS	판매채널
검색광고	방문로그	텍스트분석	자사채널	방문로그
검색량	구매전환	해시태그	경쟁사채널	구매전환
점유율(SOV)				마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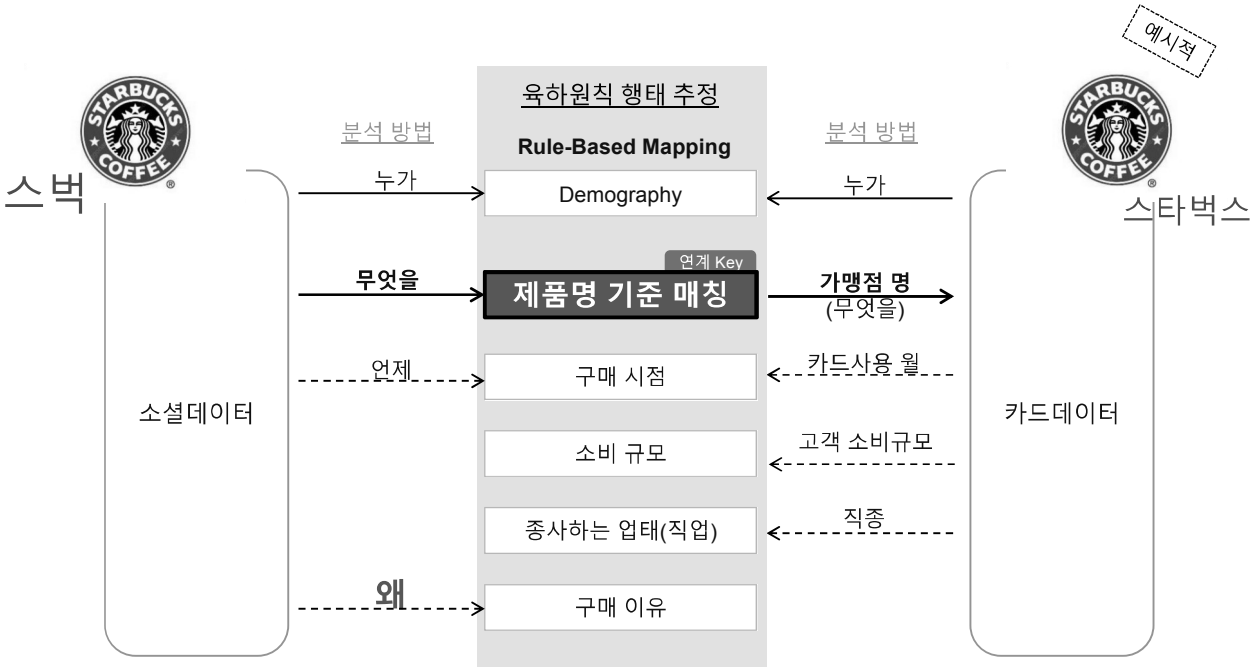
360-degree Analysis

콘텐츠매력도	소비자분석	시장분석	예산효율성
자사 콘텐츠	일반고객	키워드기반 텍스트분석	집행단가
업계 Top 콘텐츠	프리미엄고객		ROAS

DataMKTKorea

데이터 연계 방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셜 데이터와 카드 데이터를 연계하여 소비 트렌드 분석



DataMKTKorea

데이터 분석 체계

속성 분류 체계와 언어분석 툴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데이터화 시킴

● 문화 속성 예시

Lv 1 장르	Lv 2 종류
뮤지컬	오리지널/내한공연
	넌버벌 퍼포먼스
	라이선스
	창작뮤지컬
	패키지 공연

속성
작품관람
출연진
예약
✓좌석
서비스
…

예시적

@Musical_ 뮤지컬 처음 보는 거라 B석 끊었어요. 그런데 좌석이 되게 멀고 잘 안보이더라고요 4층 B석은 1열 아니면 그냥 3층이나 2층 앉으시는게.. 3층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1~2층에서 보세요 소리는 잘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분석결과:
문화/뮤지컬/창작뮤지컬/좌석/부정

● 체육 속성 예시

Lv 1 참여 유형	Lv 2 종목
개인운동	필라테스
	수영
	스피닝
	트래킹
	조깅

속성
✓강사
가격
✓시설
운동기구
청결
…

@Fitness_ 강사님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필라테스 처음인데 자세 보시고 필요한 운동으로 착착 진행되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1:1로 받으니 제대로 운동한 기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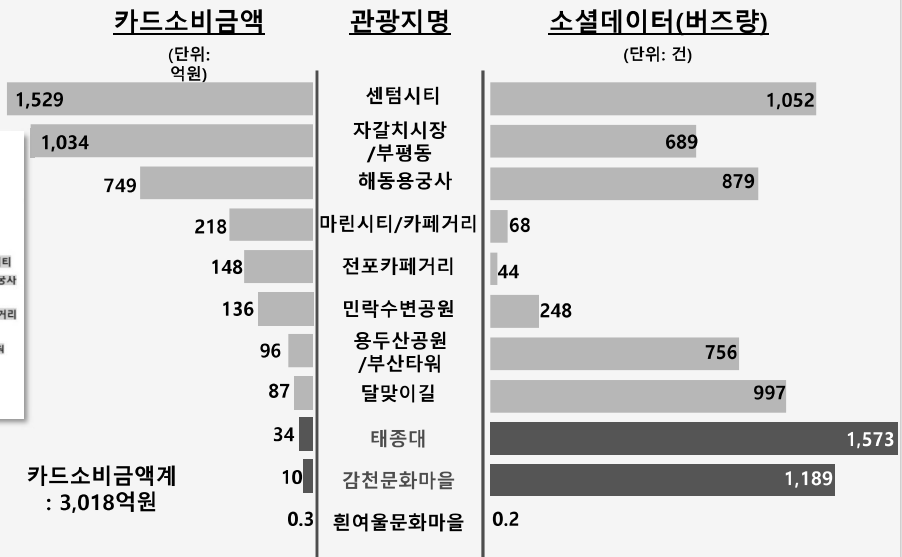
분석결과:
체육/개인운동/필라테스/강사/긍정
체육/개인운동/필라테스/시설/긍정

DataMKTKorea

문화 소셜 빅데이터 활용 사례 – 부산시 (1/2)

"소셜 데이터"와 "카드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 창출

[부산 관광지]



태종대, 감천문화마을의 카드 소비는 작지만 온라인에서 언급량은 상당히 높음

DataMKTKorea

문화 소셜 빅데이터 활용 사례 – 부산시 (2/2)

소셜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음

관광 카테고리 : 주요 명소

부산시 :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 설정

DataMKT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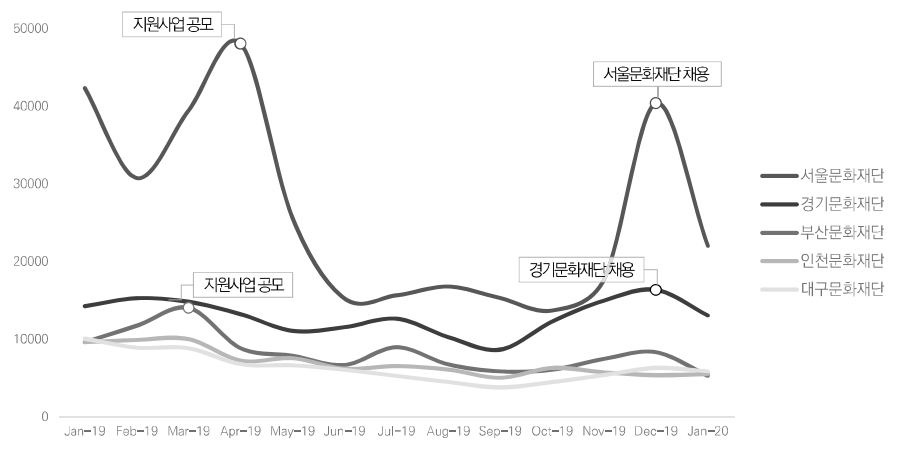
한국광역문화재단 브랜드 온라인 관심 발생 트렌드

-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 전체 광역문화재단 검색량 38% 점유
- 지원사업, 채용 공고에 즉각적으로 검색량 반응 일어나는 문화재단 키워드

한국광역문화재단 브랜드 네이버 검색 트렌드

(단위: 건)

No.	브랜드키워드	연간 검색량	점유율
1	서울문화재단	342,998	25.78%
2	경기문화재단	168,461	12.66%
3	부산문화재단	107,502	8.08%
4	인천문화재단	91,130	6.85%
5	대구문화재단	82,906	6.23%
6	광주문화재단	80,844	6.08%
7	대전문화재단	68,009	5.11%
8	세종시문화재단	58,442	4.39%
9	경남문화예술진흥원	51,745	3.89%
10	충북문화재단	50,785	3.82%
11	강원문화재단	50,245	3.78%
12	제주문화예술재단	43,267	3.25%
13	충남문화재단	42,516	3.20%
14	울산문화재단	36,386	2.74%
15	전북문화관광재단	30,467	2.29%
16	전남문화관광재단	24,600	1.85%



기간: 2019.1.1 ~ 2020.1.26
출처: 데이터마케팅코리아 마대리(Ma:deri) https://www.maderi.co.kr/

DataMKTKorea

데이터마케팅코리아 '마대리(Ma:deri)

키워드(검색량, 버즈량), 홈페이지, SNS, Mall 등 분석

출처: 데이터마케팅코리아 마대리(Ma:deri) https://www.maderi.co.kr/

DataMKTKorea

유튜브 '데이터맛집' ('19.10.28 개설)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를 쉽고 재밌게 콘텐츠로 구성하여 제공

토론 3 이수철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과장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본 지역통계와 지역문화재단

0. 들어가며

- 백선혜 선생님의 훌륭한 발표문을 보면서 저는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문을 보기 전에는 이제 기초단위의 지역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수행,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국단위의 조사 및 서울 정도에서 광역단위의 지표만 조사 축적되고 있고, 따라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과 기초단위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한 정책수립 및 시행이 아직까지는 요원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직까지는 인구단위의 표본을 목표로 했던 빅데이터 활용은 아직까지는 마케팅 차원의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빅데이터의 수집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토론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논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문화관련 서베이를 해야 하고, 이렇게 조사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결국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가 되겠지요)

1. 빅데이터와 문화정책

- 백선혜 선생님의 발표문에 보면 국가차원에서 정책수행을 위한 서베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화 되어 있고, 데이터축적도 많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문광연 통계센터 노력)
- 그러나 현장에서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샘플의 사이즈 수나 체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국단위의 줄세우기 평가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 그리고 문광부 정책기관(Arte, 지역문화재단)이 개별적으로 공모를 발주해서 필요에 따라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단위의 공모사업에는 만족도를 비롯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위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조사되는 서베이 데이터들도 귀중한 문화통계데이터라는 점입니다.
-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을까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문광연을 비롯한 국가연구기관, 혹은 서울연구원(혹은 서울문화재단) 같은 여력이 있는 광역기관이 해야 할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의 주요 소스가 '공공데이터(건강보험, 취업통계 등...)와 자연어 처리 분야'(민간영역, 특히 경제영역에서는 자제수집+공공+자연어+기계어 처리+AI 활용)라는 것을 보면 이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화관련 중요기관(연구원)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을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통계청(+@) 및 타분야 전문가들과 협업 필수)

2. 빅데이터와 지역문화재단
- 그리고 이것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련 종사자들은 통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될 데이터를 가지고도 문화분야에서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어렵게 몇몇의 노력에 의해 데이터의 활용을 실천한다고 해도,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오히려 제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표1, 성남의 사례 참조)
-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지역의 통계는 참여자 수와 프로젝트 단위의 만족도만 남게 됩니다.(몇명이나 왔냐? 만족도는 높은가?) 지역의 형편이 이렇다면, 지역차원에서 통계를 자체 생산하여, 이를 활용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 그렇다면 지역은 통계가 아닌, 활동가들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먼저 서베이의 숫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향수실태조사(표본 10,000)의 경우 서울 표본는 1,227명입니다. 서울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5개 자치구로 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조군만 있고, 자체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표본할당이 아주 잘 되어 있다면 유효하지만 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지역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서울의 경우 문화향수 실태조사+서울(형)서베이+서울문화재단 조사의 항목을 서로 조금만 조절한다면 기초단위에 자료를 추출하여 정책에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서베이의 표본의 수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항에 따라 조사 항목(INDEX, INDICATOR)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초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광역 혹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아래 표1 2016년 경기와 성남의 협업 사례 참조. 물론 현재는 사라졌지만)

- 또 백선혜 선생님이 제기한 통계큐레이터도 훌륭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표 24]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공동체 사업평가 지표 개발 및 검증 과정 (2013~2018)

2013년	2014년	2015년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2013)』	『생활예술정책 성과지표 개선 연구 – Subjective Well Being의 관점에서』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성과평가』
프랑소와 마타라소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1997)』 지표 활용	⇨ 프랑소와 마타라소의 사회적 효과 지표와 개인의 주관적 행복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생활예술 통한 행복감 측정틀 제시 색채와 자유연상에 근거한 사업 브랜드 이미지 조사	⇨ 2014년 측정틀 기반으로 설문 개발 후 현장 조사 취향공동체와 지역공동체 사이의 유사점/차이점 비교분석

2016년	2017년	**2018년**
『2016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연구』	『2017 생활문화공동체 성과평가 연구』	**『2018 생활문화공동체사업 3개년 종합 성과평가 연구』**
경기도문화재단(2016),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틀 연구』 측정틀 기반으로 설문 재구성 현장 조사 및 요인분석 통한 측정틀 검증	⇨ 2016년 연구 외부 자문 통해 개선 및 안정화 단계	⇨ **2016~2018 3년 정량평가 종합 분석**

3. 통계와 문화정책에 요청사항: 국가 혹은 광역에...

- 문화패널데이터 구축 필요(노동패널, 복지패널, 산업안전패널 등). 패널데이터는 시간대별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문화정책영역에서도 이제 가능성 고려 필요
- 정책수용자 중심의 지표개발 필요. 미디어에서는 수용자 연구가 활발하지만, 정책영역에서는 부족합니다. 이제 참여자수와 사업만족도와는 결별!!
- 전략적 차원의 지표개발 필요. 비용편익분석(경제유발효과 등)과 같이 타 분야에서 진행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효과성 설명필요(기재부 등 예산부서의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종합토론

MEMO